

第212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6月22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金貞淑 위원

사 학 비 리

1. 정의여중·고 사태

○사태의 발단 : 학교 법인 송죽학원(이사장 김옥선) 산하서천 정의여중이 재단비리 척결과 학내 민주화 등을 요구해 온 교사 4명을 지난 2월 섬지역 학교로 일방 전보해 해당 교사들이 반발. 이에 대해 항의 농성하는 교사 15명을 파면하고, 1명을 정직하는 등 중징계해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가면서 석 달 동안 난항을 거듭해 왔음

○사태악화 :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학교분규로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5월30일 학교법인 송죽학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28일자로 정의여중·고를 폐교 조치함

○현지 분위기 : 충남교육청과 학교법인 송죽학원이 충남 서천군 장합읍 정의여중·고에 대한 폐교 조치를 내리자 전교조 등이 반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충남교육청이 재단측의 교사 대량 징계 사태를 방조한 채 폐교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충남도교육청은 비리 재단과 야합한 혐의를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적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

○요구사항 : 현재 정의여중·고 교사 16명은 「폐교철회」와 함께 ▽충남교육감, 부교육감과 재단의 유착관계 수사▽ 학생들에 대한 가스충난사와 폭력의 배후 수사 및 법적 책임 추궁

○교육부는 경인여대와 학교법인 태양학원의 운영실태와 비리여부에 대해 종합감사를 6월7일부터 17일까지 실시

○6월18일(日)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경인여대 사태에 대해 방송

※질의사항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사학의 분규는 사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기인하는 것이지만, 교육부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학분규에 대해 사태가 확대될 때까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수습·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사학에 대해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 중인지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 선거 제도 문제

1. 교육감 선거 과열·혼탁

○현황

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시·도 교육감 선거가 혼탁·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하고 현직 교육감·교육위원을 경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국장도 지난 6월2일 「교육감 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불법이 계속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작은 위법행위라도 모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점

6월 말 충남, 7월 말 서울, 전북, 12월 대전에서 예정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관련개입, 사전선거, 향응제공, 상호비방으로 혼탁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교육현장에서까지 관권선거, 사전선거, 향응

제공 등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민자치의 의미를 살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단순 다수 득표자를 선거 당선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교육세 인상)

○현황

민주당은 과외 허용에 따라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건의에 따라 교육세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실 증설, 교육정보화 등 공교육내실화를 위해서는 2004년까지 4년간 34조3천억 원이 필요하고, 그 중 부족분 6조4천억 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점

우선 재정경제부는 「교육세 존치와 증세여부는 국민의 세금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간에 협의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세 인상이 결정될 경우 담배, 가전제품, 휘발유 등 가격의 연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영구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소세나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재정경제부는 세율인상에 앞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재정확대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권 이후 국민의 세 부담이 계속 가중되어온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교육세원 발굴과 전환에 따라 생겨날 다른 부처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2. 교육부는 교육세 인상의 목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확충이 곧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정확충 노력은 교

육부의 제법그릇 챙기기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인해 나타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교육세 인상 카드로 무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한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낳게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재정경제부는 「교육세 인상 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견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위원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공존, 협력의 전기를 마련. 이에 맞춰 학생들의 대북인식은 크게 바뀌면서 국가 안보와 체제우위 위주로 진행되던 통일교육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

이는 교과과정의 개편뿐만 아니라 기존의 냉전 체제에 익숙했던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보와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는 주입식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와 시간의 배정이 필요함.

1. 현행 통일 교육 현황

- 1) 통일교육 지원법 - 1999년 2월 5일 제정
- 2)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 1999년 8월 6일 제정
- 3)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 교육부, 2000년 1월

- 목표

-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 통일관 정립
- 통일환경과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한 건전한 안보관 확립
- 평화와 화해, 협력의 중요성 인식 및 실천의지 형성

- 기본방향

-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평화정착의 필요성 인식
-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공존 추구하는 평화의식 함양
- 신뢰회복, 상호이익 도모하여 통일 후의

사회통합 대비

-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
- 이질화 극복 및 민족 동일성 형성하여 통일 의지 형성
- 민주시민교육 강화
- 교과서 개편, 자료보급, 교원의 전문성 신장

- 현행 통일교육 방향

- 교과교육을 통한 지도
-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 재량활동을 통한 지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도

4) 현황

○ 통일교육 실시현황

- 통일교육 시간 및 관련 교과목내의 통일교육
 - 주로 도덕, 사회과 과목에 집중되어 있음.

- 교과내용 중 통일교육 시간

- 초등학교 : 연간 36시간
- 중등학교 : 연간 34시간(신문보도 12시간)
- 고등학교 : 연간 28시간(신문보도 17시간)

• 교과서 외 통일교육

- 5분 통일교육 실시예정 : 학교실정과 학년 실정에 맞게 수업시간 중이나 조회시간, 종례시간에 유동적으로 실시
- 통일교육 시범학교 지정현황 : 23개교
 - 초등학교 : 8개교
 - 중등학교 : 9개교
 - 고등학교 : 6개교
- 지원 : 각 시·도 교육청별로 별도로 지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1년에 5백만원 지원 및 1주일 1시간 통일교육 시간 할애

○ 통일교육관련 책정예산 : 통일부 책정

- 1999년 : 69억1,969만원
- 2000년 : 47억1,865만3,000원

현 통일교육의 문제점

○ 교육목표 및 내용상 문제

기존 6차 교과과정까지는 안보교육과 우리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을 적대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많이 삭제되었으나 남북 비교를 통한 체제우위와 통일의 당우성을 다루는 내

용이 주를 이룸. 이는 남북의 차이를 부각시켜 통일은 힘든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북한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은 남북의 동질감 형성에 기여하지 못함.

○ 교육과정의 문제

통일에 관한 교과내용은 주로 사회, 도덕 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타 과목에는 통일과 연계한 내용이 거의 없음.

사회, 도덕과목의 경우에도 교사들에 따라 교육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시간도 일정하지 않음. 또한 통일교육 지정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교과시간 외에 따로 통일교육을 할 시간과 정보 및 자료가 부족함.

○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미흡

초(140,000) 중(92,590), 고(104,351)등 교사 총 336,941명 중 지난 1999년 통일교육을 받은 교사는 1,722명이며 2000년 현재는 475명임.

교육내용은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체제 및 분야별 실상, 남북관계 변천과정, 통일환경 및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및 과제 등 우리의 통일정책과 남북한의 체제비교 및 북한의 실상 등을 다루며, 주로 이론에 치우친 교육 및 안보교육과 우리체제의 우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실시됨. 따라서 안보교육을 받은 나이많은 교사들의 통일관 형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통일교육 관련 질의서

1. 기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남북 체제 비교를 통한 우리 체제의 우월성 및 북한을 비하하거나 적대시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됨. 그러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뤘던 지금 현재 실행 중(초등 1-3학년)이거나 준비중인 7차 교육과정에는 평화의 소중함 및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과 북에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정달 및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 자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7차 교과과정에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 바람.

2. 현재 교사들은 냉전체제 아래서 반공교육을 받고 자라 학생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음.

또한 교사들이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정보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받은 사람도 0.6%(’99~현재)밖에 되지 않음. 교육내용도 남북체제의 비교, 통일방안 등 이론적이고 안보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음.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지원 예산은 ’99년보다 약 1억이 삭감.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내용도 현장과 체험을 가미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바람. 또한 각 학교마다 통일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현재 통일교육은 교사의 교과시간 외에 시민단체나 외부 강사에 의한 교육은 없는 상태.

이를 확대해 민간이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특히 현재 통일부로부터 통일교육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바람.

4. 전국에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23개의 학교에 주당 1시간씩의 시간할애와 1년에 5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함.

이는 교재를 구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움.

따라서 통일교육 시범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와 이 제도의 확대시행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람.

5. 이제는 통일이 생활교육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봄. 따라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5분교육은 각 학교별, 초·중·고등학교 단계별로 실정에 맞추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내용도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교제도 책자뿐만 아니라 테이프, CD,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함. 다만, 예전의 반공교육처럼 경직되고 주입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수업시간에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함.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고액 과외에 대한 예방대책

□현 황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의해 촉발된 고액과외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의뢰) 여론조사>

※기간(5월22일~6월5일), 대상(전국 학부모 6,088명/교원 1,352명/여론주도층(120명) 총 7,560명
 -고액과외 단속여부 : 학부모(77.9%), 교원(69%), 여론주도층(60.8%)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
 -단속이유 : 계층간 위화감 방지(45.3~57.1%), 입시경쟁 불평등 방지(25.7~31.8%)
 -고액과외의 금액기준 : 여론층 및 지역에 따라 그 폭이 큰 편임.
 -과외단속의 방식에서는 과세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지지한 반면,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10% 전후의 지지만 나타남.

○20일 교육부는 자체(과외교습대책위원회) 내에서 고액과제 기준설정을 포기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이 남.

○교육부의 과외대책이 연기되면서 고액과외가 대다수의 중산층까지도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고액과외를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함.

□문제점

○단기적 처방에만 집중된 교육부의 대응력
 -과외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의지가 없다면 단기적 처방은 그 유의미성을 상실함.

-교육부는 단기적인 처벌 또는 규제 위주의 접근으로 인해 교육주체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준 인상임.

-또한 고액과외 기준설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고액과외 기준에 대한 사회적 척도와 합의의 정도를 포기한 것으로 향후 정책실행의 혼선이 우려됨.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는 과외대책의 부재

-과외의 문제는 공교육의 위협임과 동시에 학보모들의 가정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며, 이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간격을 멀게 하여 궁극적으로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임.

-따라서 그 해결책의 모색도 교육주체와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임.

-하지만 교육부의 경우, 이러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소홀했음.

□과외대책의 제도적 방향

○사교육도 교육적·사회적 책무를 지니는 실체임을 인정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의 범주는 공교육에 육박할 만큼의 수준에 있는 현실적 교육실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교육적 책무를 담당해야 함.

-현 과외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건강한 기능적 분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는 개방적·발전적 자세를 가져야 함.

○교육적 책무의 관점에서 모든 과외교습자 “의무신고제”를 도입

-의무신고제의 도입을 통해 과외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음성적 과외의 사전적 예방을 기함과 동시에,

-향후 공교육과 사교육의 기능적 분화 및 발전적 조화를 위한 기본적 자료로써 활용하며, 정부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

※신고절차를 최대한 용이하게 만들어서 신고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그 방안으로 단위 교육청 신고(절차 간소화), internet을 통한 On-line 상의 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고액과외자의 경우, 조세 정책적 차원에서 규제방안 모색

-고액과외자의 경우, 과징세율 적용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한 제재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며.

-성실신고자의 경우, 연간 수입에서 누진·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에서 징수하는 방안 추진.

-이러한 원칙 하에 고액과외가 일으킬 계층간 불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고액과외 기준의 설정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관리체계 도입

-현재 과외비의 수준을 조사한 근거에 의해 정부 차원에서 고액과외 수준에 대한 느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타당함.

-초·중·고의 분기납부금을 최저로 하고, 일용근로자 면세점이 일당 5만원 30일 기준 월 150만원 정도를 최고로 해서 이의 절반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공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정부 차원에서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을 공시하고, 지방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지역단위(시·도 교육청 수준)의 “과외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외문제를 전담

-시·도 교육청 단위의 학부모·시민단체·교사대표·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설협의체인 “과외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외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관리방식을 도입.

-이는 지역단위 교육의 자율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역사의 교육의 공론장으로써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장기적으로는 이 협의회를 통해 과외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의 전문적 특화교육의 육성으로 나아가는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외대책의 정책적 방향

○공교육 강화 방향의 유지와 사교육과의 순기능적 기능분화 고려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편적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인식적·제도적·행정적 발전플랜을 제시하고, 對국민 홍보를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함.

-사교육 부분이 해소되기 힘든 부분이라면, 공교육과의 기능적 분화를 통해 보충적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 현장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전환(예, 기술교육훈련, 생태환경교육, 사이버학습교육 등).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한 과열경쟁 교육구조의 개선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와 특성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획일적 입시의 장벽을 제거.

-학연구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기업·정부기관의 개방적 인재풀 제도와 같은 방안 고려.

○21세기 맞는 다양한 교육방안의 모색

-공교육의 On-Line/ Off-Line 양방향의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비용의 최소화화 효과의 최적화 모색.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고용과 연계된 공교육체계의 구축을 통한 사교육과의 기능적

분화체제의 구현.

□질의

- 현실적으로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체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假기준의 설정은 가능한 것이 아닌지?
- 입시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개된 교육개혁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對국민 홍보계획은 세워졌는지?
- 20일 고액과외 기준 포기 발표와 같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를 여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 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 및 잡무의 경감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서, 현 교원이 real time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폐단을 중·장기적으로 없애나가는 민관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할 “지역과외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鄭昌和 위원

고액과외 문제

1. 고액과외 문제

1980년8월1일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2000년4월27일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후 교육부장관은 5월1일 고액과외 단속을 위해 과외교습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를 구성하여 고액과외의 기준설정,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년만에 다시 전면적으로 허용된 과외에 대한 찬·반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외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애초부터 위헌 소지가 예상된 문제였다. 개인 재능의 불평등이 과외를 금지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른다거나 청소년들의 정상적 성장이 저해된다고 보는 일반론은 타당성이 없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교육시키고 스승이 이를 가르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가장 평화로운 자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교육 부실화, 학부모 부담 가중, 계층간 위화감 확대 등의 부작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사교육비는 초·중등학생의 경우 지출 총액의 11-13%에 이르고, 과외비용은 초·중등학교 학생에게만 한정하더라도 약 5조8천억

원으로 사교육비의 4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아무튼 교육부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설정하느라 고심하며, 15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예컨대 140만원은 저액이고 155만원은 고액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의사, 변호사들의 소득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稅政 능력인데 어떻게 과외액수를 정확하고 공평하게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실사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또한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국고에서 2조1,000억원, 지자체에서 2조2,000억원을 추가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조한 사항인지 밝히기 바란다.

따라서 교육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기준 설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작으로 교육문화를 창출해 나간다는 자세로 보다 본질적인 교육정책부터 바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대학교 학부제 실시의 문제

학부제란 학생선발을 학과별 체제에서 유사학과를 통·폐합한 학부단위로 선발하여 2-3학년 때 학과를 대신하여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교수배정도 학부단위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의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전공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학문의 계열화·통합화를 도모하며 대학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부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대학 경영자는 학부제 도입의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하므로 비용절감을 내세워 학부제의 전면 실시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실시를 유도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교수간의 경쟁의식을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폐강의 가능성을 의식해 학생위주의 강의를 해야 하는 교수의 권위실추를 개탄하며 기초학문의 연구의욕이 상실된다고 비판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전공의 자율선택권이 부여됨으로써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무엇을 배웠는지 몰라 학문의 정체

성이 상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학부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과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면 학생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지난날 학과를 지나치게 세분화했던 교육부가 자신의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부제를 창안한 것은 아닌지. 학생과 교수들의 불만을 사는 학부제를 다시 학과제로 환원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를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한편 전문대학도 학과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몇 년 후에 학부제를 시행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이 견해는?

3. 경인여자대학 재단비리 문제

인천 소재 경인여자대학 재단의 등록금 유용,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심각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하여 교육부가 지난 6월7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감사를 시행한 것은 경인여자대학 문제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쟁기로 막는 꼴”이 아니었는가. 그 내용과 결과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함께 전국 대학교 및 대학의 학내분규 사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

4.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문제

금년 1-2월에만 초·중등학생 3만 내지 5만 여명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학생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대규모로 외국유학을 가는 사례는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기현상으로서 우리 공교육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가슴 아프다. 모름지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와 같이 생활하여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심신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학과공부도 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들 조기유학생은 올 공교육에 불만을 느끼고 오로지 영어라도 한 과목 건져보자고 혈혈단신 아니면 부모 중 한사람만 같이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제화·세계화에 부응하여 조기에 영어와 외국의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이로 인한 외화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초·중등기간에 우리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건강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심신발달과 기본교육 그리고 국가관 교육

을 정부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조기유학이 붓물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교육체계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체제이기 때문이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입학의 어려움 등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초·중등학생의 해외유학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갔는지를 밝혀 주고

둘째, 많은 나라에 교육관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관이 각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실태나 문제점을 조사·보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과도한 조기유학을 억제하는 정책대안으로서

첫째, 고액과의 단속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그동안 고집해 온 중등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을 아예 포기하여 공교육체계를 바로 잡을 의향은 없는지?

둘째, 초·중등교육이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등 사학에 학생선발권, 교과과정편성권, 수업료 책정권을 모두 부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5. 저소득층 지원정책 문제

교육부 2000년 주요업무보고(2000.6.22) 41면부터 43면까지 저소득층 교육지원 강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학비지원, 정보화 교육지원의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복지성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의 선정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왔다.

그 선정기준이 정확하지 못하면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며, 조세낭비는 물론이려니와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정책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주요업무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더라도 그 숫자가 중식지원대상과 컴퓨터교습비 전액지원대상이 약 35만 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고, 「저소득층」·고생 학비지원 대상은 40만명으로 명기되어 있다.

저소득층의 범주는 무엇이며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6. 농촌지역 학생의 급식문제(4번 질의와 관련하여)

교육부 2000년 주요업무보고(2000.6.22) 42면에 중식지원 대상이 초·중등학생 16만4천명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중식지원 대상자는 각각 몇 명이나 되는가?

현재 농촌지역 급식은 중·고등학생까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생까지 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계획은?

교육부의 교육위원회 참고자료「과외과의 예방 및 공교육내실화 방안(2000.6.22)」 17면, 중식지원 학생 대상자 선정방법으로 「담임교사 추천 후 자치단체에 가정환경조사 의뢰」라고 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 생계보호자와 실직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잘 활용하면 결식학생을 줄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7. 교육재정 확보방안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교육부 교원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와 학교붕괴 현상으로 대표되는 총체적 교육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4월 과외금지를 규정한 학원법의 관련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외가 전면 허용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내실화를 전제로 한 정책과 교육예산 전반에 걸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1조 6천억 원 정도의 지방교육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우리의 GDP대비 교육재정의 규모가 '97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담배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일부 교육세의 징수기한이 2000년12월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란다.

8. 통일교육문제

최근 남북관계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 따

라 통일에 대비한 교육과정 연구나 통일관련 교육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의 교육내용에 관한 협의 절차 및 남북한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이 긴요한데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정책추진 내용과 추진과제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9. 실업계 고등학생의 전문대학 특채 문제

교육부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전문대학 특채를 권장하여 제도화하였는데, 실제 전문대학 당국과 담당교수들은 이들의 대부분이 수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 바란다.

○李在五 위원

1. 통일에 대한 재교육 대책 세워라!

- 통일시대의 이념적 충격과 국민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일, 북한, 반공 교육의 재정립 및 재교육 필요
- 민족이 진실로 하나되는 통일작업, 교육부가 발벗고 나서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사히 끝나고 '6·15 남북합의문'이 발표되었다. 2박3일 동안의 남북정상회담은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역사적인 성과 이면에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었고,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는 상반된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정보가 단 며칠동안에 브라운관을 통해서 한꺼번에 쏟아짐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고 반공이데올로기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른바 '김정일 쇼크'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은 세대간, 계층간, 교사, 학부모, 학생간에 이념적 충돌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 혼란의 이유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통일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55년동안 우리의 통일교육은 체제수호를 위한 정치적인 차원의 적대적 반공교육에만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에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체제가 아닌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으로 바로잡아

야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대비하여 20여 년 전부터 아닌 민족에 중점을 둔 통일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60년대부터 정치교육법을 제정하고 연방정치교육센타를 설립하여 통일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8년에는 문교부장관회의에서 15개항의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서'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앞으로 현 정부가 통일로 가는 길을 잘만 닦아 준다면 짧게는 5년에서 10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통일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것을 담당해야 할 교육부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북한, 반공교육에 대한 재정립 및 재교육이 시급하며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향후 통일교육을 위한 역사연구나 자료수집 등 교육부문에 있어서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계획이나 대책은?

2. 3대 정책대안에 대한 교육부 대책

-15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통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첫째, 교실붕괴 현상 및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 담당기능을 이관 통합하여 교육부내에 '청소년문화국' 또는 '청소년정책국'을 설치하자는 것,

-둘째, 교육개혁과 각종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콩나물 교실, 컨테이너 교실, 무너져가는 교실로 대변되는 현재의 낙후된 학교환경 등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부 산하에 '학교시설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하자는 것,

-셋째, 사학비리 및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립대학특별감사반'을 설치하자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통해 올해 초에 새로 취임한 문용린 교육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함.

(1)공교육내실화 대책

-올해 4월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항 위헌결정에 따라 과외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공교육정상화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어짐.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교육부의 대책은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월 과외교습비 150만원 초과자에 한하여 의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과거의 경험의 비추어 보건데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할 수가 없음.

-이번 대책은 '신고의무제'에 대한 실효성 미흡, 교원이나 전문학원강사의 과외시장으로의 이탈,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심화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함.

-고액과외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폐단이 심화될 경우 공교육 부실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포함한 좀 더 강력한 규제대책이 필요하며, 최소한 고액과외는 할 수가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개선대책은?

-교육부는 과외과외 예방 및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10가지가 넘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됨. 우선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기전까지 1년 6개월을 무대책으로 있다가 갑자기 2개월도 채 안된 기간동안 대책을 만들었으니 올바른 방안이라 하더라도 과연 정책추진이 5년 동안 제대로 될 것인지 신뢰를 할 수가 없음.

-34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조달 대책도 불확실함. 기 확보되었다고 하는 재원을 차지하고 미확보된 10조7,000억 원만해도 교육세 증세, 관련 법조항 개정 등 불투명한 요소가 많이 있음.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정책만해도 기존에 교육부가 계속 추진해오던 것의 나열에 불과함. 2002학년도 대입제도 정착, 영재교육 활성화, 측기적성교육 지원 강화, 소외계층 지원확대 등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이 없음.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중등교육 부실화에 대한 지적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 중등교육 부실에는 최근 급속히 변지고 있는 교실붕괴, 교실황폐화 현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교실이 안정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와 정서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개혁과 교육정책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
 - 어제 6월21일자 언론보도에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은 체벌교사를 고발하고 학교는 학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황폐해진 교육현장에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대책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것임.
 - 본 의원은 공교육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교실 붕괴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작은 정부’추진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총리제의 도입과 함께 정부의 청소년 담당기능을 총괄 조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국’을 교육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 이에 대하여 청소년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대책을 밝히기 바람.
 - 아울러 작년 국감 이후 지금까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실적 및 정책연구 결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2) 학교환경개선 문제 해결방안
-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튼튼해야 됨. 그 중에서도 열악한 학교환경개선이 급선무이며, 교육예산의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콩나물교실, 컨테이너교실, 무너져가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공교육내실화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임.
 - 공교육내실화 방안으로 교육부는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에 5년 동안 25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투자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현재의 교육투자시스템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따라서, 교육부 산하에 ‘학교시설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해서 투자와 사후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함.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 '99년11월 현재 D, E급 판정을 받은 노후 학

교시설물은 D급 112건, E급 20건으로 총 132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 국감 이후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개·보수 혹은 개축 조치가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 아울러 지난해 수해로 인한 학교시설물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돈 복구예산의 규모와 그 중 학교시설물 노후로 인한 사례건수와 피해규모, 그리고 올해 일찍 시작되는 장마에 대한 수해대책과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3) 사립대학 비리 및 분쟁해결 방안

- 15대 국회에서 '98, '99년 2년 동안 사립대학 비리와 분규대학의 해결을 위해 10여개 대학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 그동안 전국의 많은 사학에서 비리와 학내분규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적절한 조치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대안의 하나로써 본 의원은 법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사학비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 및 관리를 위하여 ‘사학비리특별감사반’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가동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아울러 현재 문제화되고 있는 일부 사학분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묻고자 함.
- 인천에 있는 경인여대는 재단의 부정과 비리가 문제가 되어 한 달째 학내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교수와 학생들의 주장에 의하면 재단 측은 즉별경영체제로 대학을 사유화하여 교수, 학생, 직원을 탄압하고, 횡령과 유용을 일삼고 있다고 함.
-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경인여대에 대하여 최근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육부의 감사결과는 무엇이며 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람.
- 충남의 정의여중·고 사태는 사학재단의 부실 운영 및 외계부정 등의 전횡에 항의하는 교사들을 징계하면서 100여 일째 학사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다가 5월30일 재단의 폐교방침이 발표되고 동시에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가 심화되었음.

- 정의여중·고 교사와 시민단체는 재단과 도교육청의 밀착관계에 의한 교사와 학생을 도의 시한 무책임한 행정적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도교육청은 고질적 분규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폐교요청을 수용하였다고 함.
- 그러나, 재단과 도교육청의 폐교방침은 정상화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권과 학습권을 일시에 내팽개쳐 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됨.
- 학내분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규가 일어나는 학교마다 폐교를 해버린다면 교육이란 자체가 무의미함.
- ☞ 교육부는 정의여중·고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진상과악과 사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의 현장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부의 대책을 밝히기 바람.

3. 시국사건 관련 미임용자에 대한 대책

- 지난번 '시국사건 교원임용제외차용특별법'의 발효로 '99.11 다행히 106명의 미임용자가 혜택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기가 늦어져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되었음.
- 이들은 대부분 시국사건 등 민주화운동에 연루되어 구제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한 사람들임. 법제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도 반드시 혜택이 돌아야 할 것임.
- ☞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임용발령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사계수집을 할 의향을 없는지 밝히기 바람.

○金徳圭 위원

1. 南北頂上會談 이후의 統一教育 혹은 理念教育의 재정립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후에 변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겠지만,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점은 북한에 대한 반감이나 경계심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의 의미는 두고두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 교육일선에서 겪을 당혹감과 혼돈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이테올로기의 수정작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政治教育(political education) 또는 市民性教育(citizenship education)으로서 民主主義 指向的 政治教育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근간은 自由民主主義·資本主義임이 자명합니다. 물론 弘益人間이라는 교육이념이 있지만, 교육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체제의 중심 이데올로기를 쫓아가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의 최우선 대상인 학생들은 교육의 이념적 측면에 대해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5.2%의 교사들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하는 등 교육관련자들의 통일문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학생의 93.9%와 고교생의 90.7%는 북한 관련 정보나 지식을 대부분 신문 등 언론에서 얻고 있으며, 학교교육을 통해 얻은 학생은 5.0~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북한관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거의 다루지지 않거나 단편적인 내용만 소개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변화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정치교육을 통해 북한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화해·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올바른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서 그에 따른 교육정책의 구체적 결정과 집행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 교육부장관 文龍麟

(黃祐呂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원 사기진작 및 연금제도에 대한 입장은?

(답 변)

-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교원의 처우 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과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기본틀을 재구조화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을 '99.12.24.에 발표하여 연구 및 여론 수렴 중임
 -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처우 및 보수체제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도입, 해외체험연수·민간기업체 등 연수기회 확대, 교원증원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등이 있으며,
 - 그동안 7차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 등에서 드러난 현장교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9월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아울러, 2000.4.18.에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스승존경풍토 조성과 교권 신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교원 연금제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학연금제정의 장기전망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 연금급여 지출이 연금부담금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05년,
 - 연금급여 지출이 공단운영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12년,
 -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1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연금재정이 불안한 것은
 - 연금부담률은 낮고 연금급여율은 높은 저부담고급여 연금체계에 문제가 있고,
 -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 또한, 연금채원에서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등 사용자부담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임
 - 연금제정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 부는 연금가입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가운데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

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 사학연금재정 장기전망 추계

(단위 : 명, 억원)

연 도	2000	2005	2012	2018	
교직원수	211,766	225,722	238,739	236,138	
수입	부담금수입	5,905	9,856	18,748	29,067
	수입총계	9,706	15,961	25,901	29,067
지출	급여지출	4,798	9,938	25,843	58,095
	지출총계	5,169	10,558	27,022	59,923
연금기금액	42,232	67,835	89,415	△5,733	

(질 의)
금년 8월 교원명퇴 문제는 없는지?

(답 변)

- 교원정년단축 이후 명예퇴직 등 퇴직교원이 예상보다 증가되어 중등교원은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풍부하여 신규교사 임용으로 충원에 문제가 없었으나 초등교원은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부족하여 신규교사임용뿐만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자 초등기간제 교사활용,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활용 등으로 충원하고 있음
- 2000학년도는 퇴직예상인원이 10,558명(명퇴:8,576명)으로서 전년도 24,972명(명퇴:15,110명)에 비하여 퇴직교원이 대폭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원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00학년도 2학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은
 - 결원예상인원 4,790명에 대하여 교육대학 졸업생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자 1,338명, 복직등기타 475명, 퇴직교원 2,977명으로 충원할 계획임
 - 또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초등기간제교사로 활용중인 5,796명은 2000. 8월과 2000. 12월 2차례에 걸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정규교사로 임용할 계획임
- 2001학년도부터는 초·중등 공히 결원 발생 교원을 신규교사임용시험을 거쳐 확보되는 자원으로 충원이 가능하여 교원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두뇌한국 21 사업의 재원 현황과 추진상황 및 점검·평가 계획은?

(답 변)

추진 현황 및 재원 현황

○두뇌한국 21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이 취약하여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경쟁력에서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뒤쳐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 국제적 학술연구수준(SCI기준 논문발표)
국가순위 17위, 서울대 94위이며('98)
- * 서울대가 아시아권 대학에서 3위에 불과('99 Asia Week)
- * IMD보고서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한국 평균경쟁력 38위('99), 28위('2000)
고등교육부문 경쟁력 47위('99), 43위('2000)/
총 47개국

○연구중심대학 및 지역대학 육성사업(BK21)은 과학기술분야 900억원, 인문사회분야 100억원, 지역대학육성분야 500억원, 대학원 시설구축사업비(서울대) 500억원 등 총 연 2000억원으로 7년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이공계 박사인력이 매년 약 1,300명이 배출되며, SCI급 국제학술지 등 게재 논문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98년 10,000편(세계17위)에서 2005년도에 20,000편(세계 10위)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임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입학제도로 개선 유도하고, 학사과정 정원감축, 대학원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교수업적평가제 도입을 연계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수준의 대학원 벤치마킹, 산학연계 운영을 통하여 2005년도에 일부 사업단은 OECD 수준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사업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서 우수대학 위주로 지나친 집중지원이라는 비판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두뇌한국21사업이 이미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입안된 정책이니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대학원의 연구력을 제고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관리할 생각임

○현재 사업단에서는 교수의 연구업적 중시, 우수 교수 확보경쟁, 대학 자체의 대학원생 지원 노력 등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착실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팀간 경

쟁력이 유발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뇌한국21 사업 핸드북 51쪽)

점검·평가계획

○또한 사업단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두뇌한국21 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위원을 위촉 중에 있음.

○평가업무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두뇌한국21 지원관리부서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음

○지원관리위원회는 사업단의 평가 방향 및 평가 기준 마련을 하게 되며, 분과별 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 특화분야 등 각 분야별로 추진실적을 직접 평가하게 됨

○이를 위해 지원관리위원회는 산업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인사 중 총 10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평가위원회는 총 60명 이내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임

○금년도에는 사업단 연차보고서 평가를 7~8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평가는 사업실시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체제의 정착과 각종 제도개혁 및 사업단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분야내 상대평가를 통한 사업단간 경쟁체제를 유도할 계획임

○평가결과에 따라 2학기 분 국고지원금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2년후 중간평가를 통하여 부진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대학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그 어느 국책사업 보다 철저한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과 중간 평가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단들은 스스로 제출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지 않으면 탈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분위기는 잡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교육부는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이번 국책사업이 한푼의 낭비없이 쓰여 당초 목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두뇌한국21 핸드북

2. 두뇌한국21 추진계획

※두뇌한국21 핸드북은 분량이 많으므로
요구하신 의원님께만 1부 제출합니다.

두뇌한국 21 사업

1. 추진 배경

- 가.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취약
 -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유능한 인력양성이 필수
 -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집중지원 필요
 - 정보기술, 생명과학 및 농생명, 기초과학 등
 - 교육과 연구의 핵심인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Post-doc, 계약교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비
- 나. 국내 대학의 학술연구수준이 취약하여, 국제적인 연구논문이 도출되지 못함
 - 국제적 학술연구수준(SCI 기준) '98년의 경우 논문발표 국가순위 16위
- 다. 지역우수대학의 지원이 미흡하고, 전문대학원 체제가 정착되지 않음
- 라. 교육부문의 해외의존 심화
 - 대학부문 해외유학비 7억불 정도 규모임
- 마. 대학입학시험이 경직화되어 다양한 입시제도 정착 필요
 - 초·중등 교육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창의성” 신장 저해

2. 사업 추진목적

- 가. 독자적 지식·기술의 창출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에 중점을 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

- 국가경쟁력에 직결되고 국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있는 대학원 육성
 - 2006년에는 해당 사업단이 선진국 TOP 10 수준으로 진입
- 선진형 사회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인문사회분야 대학원 육성
-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학문 전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교육/연구 집단의 인력양성
- 나.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우수한 지역대학 육성
 -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다. 대학의 제도개선 및 개혁
 - 입시제도 및 학사제도 개혁
 - 학부정원 감축, 모집단위 광역화, 추천 전형제, 대학원 문호개방 등
 - 엄정한 교수업적평가제를 통한 인사, 승진제도 연계
 - 사업단장의 책임과 권한강화를 통한 사업단 내의 자율성 확보
 -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의 내부경쟁을 통한 교육 및 연구력 증진 효과
- 라.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 학력만이 아닌 지·덕·체가 조화된 새로운 초·중등 교육 실현

3. 사업 내용

지원분야	지원기준 (백만원)	사 업 내 용	기 간
□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지역대학 육성(연 2,000억원)			
과학기술	90,000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적·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사업종료 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	7년
인문사회	10,000	21세기 선진형 사회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인문사회분야의 고급 신진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수준 제고	
지역대학	50,000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학사과정 및 TA/RA 인력양성	
대학원 전용시설	50,000	대학원 전용기숙사, 전자도서관 등 선진국 수준의 시설 확보	
소 계	200,000		
□ 대학원 연구력 제고(연 495억원)			

지원분야	지원기준 (백만원)	사업내용	기간
특화	11,000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분야의 전문 대학원 체제 구축을 통한 고급전문인력 양성	5년
핵심	38,500	학문 전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원 학과수준의 학사조직에 대한 고급 신진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수준 제고	3년
소계	49,500		
합계	249,500		

4. 사업의 특징

- 가. 지원분야를 국가적인 인력수급 계획과 연계 (선진국 TOP 10 수준)
 - 정보기술, 생명과학 및 농생명, 기초과학 등
- 나.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및 탈락을 통한 내부경쟁 유도
- 다. 산학협동 강화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한 사업성과의 확산
- 라. 예산의 70%를 인력양성에 지원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연구에 전념
 - Inbreeding 억제를 위한 대학원 문호개방 및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제한
 - 사업단내 내부경쟁 유도를 통한 대학원생 지원

마. 대학교육개혁과 연계추진

- 모집단위 광역화 및 유사학과 통폐합을 통한 체제 정비
- 바. 특화, 핵심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학문분야별, 대학별 균형발전 고려

5. 사업 추진경과

- 가. 여론수렴 및 기획('98.4.~'99.6)
- 나. 두뇌한국21 사업 공고 ('99.6.4)
 - 국정협의회를 통한 수정·보완('99.7.7)
 - 인문사회 분야 재공고 및 추가핵심 분야 공고('99.10.6)
- 다. 사업단 심사·선정 발표 ('99.7.21~8.31)
 - 인문사회 및 추가 핵심분야 심사·선정 발표 ('99.12.3~12.8)
- 라. 사업단 협약체결(장관/총장) 및 예산지원 ('99.11.8)
 - 인문사회 분야 협약체결 및 예산지원('99.12.28)

6. 사업참여 규모

구분	사업단 (참여사업단)	대학	교수	박사후 연구원	계약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과학기술	26(17)	14	1,403	674	375	10,376	-
인문사회	18(2)	11	265	95	62	795	-
지역대학	13(29)	38	1,143		208	2,100	6,200
특화	12	11	183	37	45	1,238	-
핵심	317	53	1,296	347	240	3,850	-
계	386(48)	73	8	0	930	0	6,200

7. 향후 추진계획

- 가. 엄정한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지원 및 탈락도 가능
 - 연차보고서, 중간평가를 통해 예산 차등지원 및 탈락
 - 중간평가 결과 사업단이 탈락시 신규 사업

단 선정 가능성을 검토

- 평가기준 등은 위원회 및 사업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교육개혁 실적 파급효과 극대화
- 나. 사업단에 대한 D/B구축,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사업 진행과정 및 성과 공개

○사업의 진행과정, 연구성과물 및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

8. 사업 기대효과

- 가. 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인 연구력 제고를 통한 해당 사업단의 미국 등 선진국 TOP 10 수준 대학으로 진입
- 나. 지역우수대학의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전문대학원 육성
- 라. 핵심사업을 통한 학문의 균형발전 및 소규모 연구집단 활성화
- 마. 대학의 제도개선 및 개혁

○학부정원 축소, 모집단위 광역화, 대학원 문호개방 등

○다양한 업적평가(교육, 연구, 봉사) 통한 우수교수 확보

○학교장 추천제, 특별전형 등을 통한 입시제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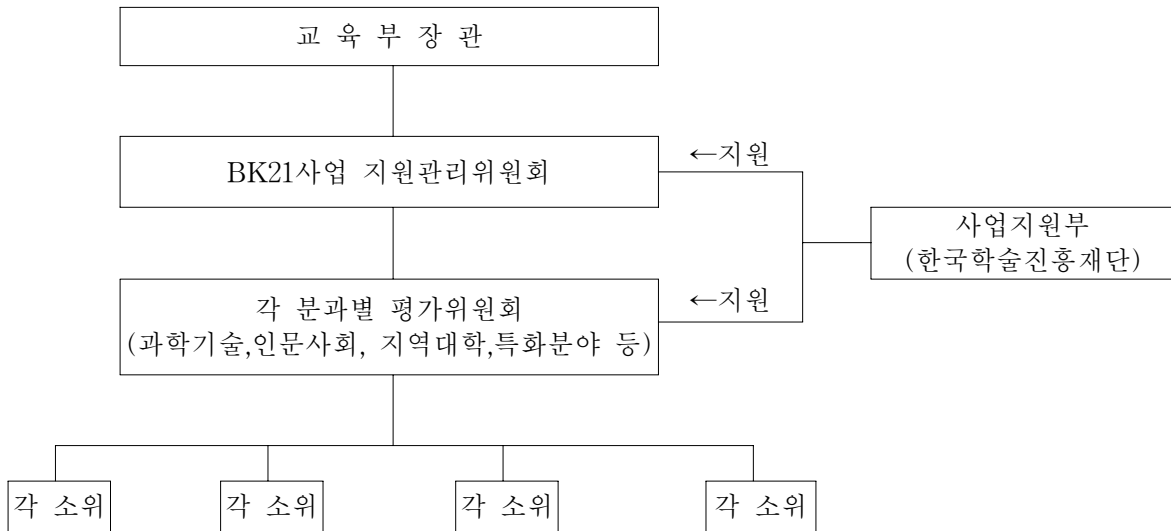
8. 사업 관리 추진 체제

가. 추진목적

○사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 추진 기구 확립

○해당대학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교부·결산, 사업계획 변경 등 연차별 사업운영에 필요시 되는 각종 실무지원

나. 지원관리체제



다. 구성·운영

1) 두뇌한국21 지원관리위원회

- ①성격 : 교육부장관 자문기구
- ②주요기능
 - 사업단 평가 기준 결정 및 결과 심의
 - 평가결과 조치방안 결정 : 예산 차등지원, 협약해지, 사업단 신규진입 등
- ③구성방법 : 아래 각 분야를 대표하는 2~3인으로 총 10인 내외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
 - 산업체 및 산업체관련 연구소 대표
 - 언론계 중견 간부 대표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인사

2) 분과별 평가위원회

- ①성격 : 두뇌한국21 지원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
- ②주요기능

- 사업단 연차보고서 기준 심의
- 연차보고서 및 중간평가 실시

③구성 방법

- 5개분과(과학기술·인문사회·지역대학·특화·국제협력)
 - * 국제협력분과는 과학기술분야 위원 중 일부 구성 운영
- 총 60명 내외, 분과별 위원수는 분야를 감안하여 구성
 - * 과학기술 : 22명, 인문사회 : 15명, 지역대학 : 9명, 특화 : 11명
- 위원장은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호선
- 필요시 각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3) 사업지원부

- ① 담당업무
 - 지원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업무 지원

• 사업단 연차보고서 분석, 평가계획 수립, 평가기준 개발, 평가관리

• 관리지침 운영, 사업단의 목표 DB구축

9. 향후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단계	6. 1 - 6.30	평가기준 작성 및 검토 평가기준 심의 및 확정	각 분과별 평가위원회 및 지원관리위원회
	7. 1 - 7.20 7.21 - 7.25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보고서 검토	학술진흥재단
심사단계	7.26 - 8.12	현장실사 - 연차보고서 내용 및 예산 집행내 역 확인	평가위원, 교육부, 재단
	8.16 - 8.26	서면평가 -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서면평 가 실시	각 분과별 평가위원회
심의·확정단계	8.30경	최종확정 -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결과 조정 및 지원금 확정	지원관리위원회

<첨부자료>

가. 지원관리위원회 명단

나. 두뇌한국21 사업단 현황 및 수행목표

<첨부-가>

BK21 지원관리위원회 명단

연번	이 름	소 속	출생년도	학 력	연 락 처	비 고
1	이 용 경	한국통신 프리텔사장	1943	학사 :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 미 버클리대	사) 2016-1000 F) 2016-1038	
2	여 종 기	LG화학 사장 LG화학 기술원장	1946	학사 :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 리하이대 고분자공학	사) 042-866-2000 F) 042-862-9796	
3	임 관	삼성종합기술원회장	1934	학사 : 트라이스테이트대 박사 : 미 노스웨스턴대	사) 0331-280-9010 F) 0331-280-9018 집) 0342-705-2657	
4	김 기 협	SK케미칼 상임고문	1946	학사 : 서울대 공업화학 박사 : 아이오와대 화학	사) 0331-245-1163 F) 0331-245-3977	
5	이 무 근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원장	1940	학사 : 서울대 농생물학 박사 : 미 일리노이대 직업기술교육	사) 3485-5001 F) 3485-5007	
6	이 진 순	KDI 원장	1950	학사 : 서울대 무역학과 박사 : 미 위스콘신대	사) 958-4001 F) 960-2952	
7	문 창 재	한국일보 수석논설의원	1946	학사 : 고려대 국문학과 게이오대학 신문연구소과정수료	사) 724-2260 집) 654-9885 F) 734-3526	

연번	이름	소속	출생년도	학력	연락처	비고
8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1942	학사 : 고려대 행정학과	사) 724-5088 F) 724-5098	
9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1936	학사 : 서울대 사회과학	사) 3270-7302 집) 705-8006 F)706-1059	
10	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1948	학사 : 한양대 교육학 박사 : 서던일리노이대	사) 783-3066 집) 406-1152 F) 780-8311	

<첨부-나>

BK 21 사업단 현황 및 수행목표

□과학기술분야

사업단 현황		주요연구과제
분야	주관대학(참여대학)	
합계 26개 사업단		총 433개 과제
정보기술	서울대(고려대)	「멀티미디어 신호전송」등 30개 과제
	포항공대(경북대)	「차세대 반도체 소자 및 공정」등 23개 과제
	KAIST(광주과기원공동)	「지능 정보 시스템」등 33개 과제
의생명	서울대	「뇌질환/뇌기능 장애 기전 및 방어기술」등 22개 과제
	연세대(고려대)	「NK세포의 세포독성능 제어를 통한 면역요법 개발」등 46개 과제
농생명	경상대(명지대)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내병성 작물 개발」등 14개 과제
	서울대(경희대)	「식물유전공학」등 19개 과제
생물	서울대(성균관대)	「생체에너지 전달 네트워크」등 15개 과제
	포항공대(이화여대)	「식물기능성 유전체 연구」등 13개 과제
	KAIST(광주과기원공동)	「발생과 세포기능 조절의 신호전달」등 10개 과제
기계	서울대(한양대)	「플랜트와 에너지 시스템의 고성능, 고효율화 연구」등 15개 과제
	포항공대(경북대)	「정밀/미세 생산 가공 기술 개발」등 13개 과제
	KAIST(광주과기원공동)	「실용최적설계 및 CAE」등 21개 과제
재료	서울대(한양대)	「신기능성 박막 및 결정의 제조와 전자 소자응용」등 18개 과제
	광주과기원(KAIST공동)	「계면형성 및 구조제어」등 14개 과제
화학	서울대(포항공대)	「에너지 및 화학산업에서의 공정시스템 및 안전」등 11개 과제
	KAIST(광주과기원공동)	「분자생명공학 및 생물공정공학」등 9개 과제
물리	서울대(성균관대)	「기본상호작용 이론」등 16개 과제
	연세대	「반도체 미세 및 이성 구조」등 6개 과제
화학	서울대(고려대)	「비정규 화학종의 구조와 반응」등 13개 과제
	KAIST(성균관대)	「반응 동역학 및 전자구조 연구」등 9개 과제
지구과학	서울대(고려대)	「대기 모델링 및 물리과정 연구」등 15개 과제
수학	서울대(연세대)	「대수적 구조」등 13개 과제

사업단 현황		주요 연구 과제
분야	주관대학(참여대학)	
생명공학	고려대	「스트레스 저항성 식물 분자 육종 및 항알레르기 유용물질 탐색」등 15개 과제
분자과학기술	아주대	「광 정보저장 신소재」등 8개 과제
사회기반/건설기술	서울대(한양대)	「경량형 교통구조시스템 기술 개발」등 12개 과제

□인문사회분야

사업단 현황		주요 연구 과제
분야	신청대학	
합계 18개 교육단		총 5 과제
인문1 (어문)	고려대(한국학)	「한국전통문화의 국제적·정보과학적 연구」등 5개 과제
	서강-이화(언어학))	「음운현상의 보편성과 개별성」등 4개 과제
인문2 (사/철학)	성균관대(유교문화)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사상적 변화과정과 사회발전모델의 모색」등 2개 과제
	충남대(백제학)	「백제의 물질문화」등 2개 과제
	동국대(불교문화사상사)	「불교와 종교문화연구」등 3개 과제
사회1 (법, 정치, 행정)	서울대(행정학)	「정책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등 3개 과제
	고려대(정치학)	「동아시아 국제관계」등 3개 과제
	서울대(법학)	「한국법제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등 4개 과제
	이화여대(정치학)	「공공가버넌스」등 2개 과제
사회2 (경제, 경영)	서강대(경제학)	「정보화와 산업 및 지역경제」등 2개 과제
	성균관대(경제학)	「경쟁과 협력의 경제학」등 4개 과제
	한양대(경영학)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위험관리」등 4개 과제
	숭실대(경영학)	「E-형 중소기업활성화 위한 경영혁신」등 3개 과제
	고려대(경제학)	「지식기반경제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등 5개 과제
사회3 (사회, 심리, 교육 등)	서울대(교육학)	「아시아·태평양지역교육기초학기반확충」등 6개 과제
	대구대(특수교육)	「특수교육 패러다임과 학교교육 재구조화 연구」등 3개 과제
	성균관대(사회학)	「21세기직업세계의 미래」등 2개 과제
	성균관-동덕여대(아동학)	「아동발달증진」등 3개 과제

□지역대학육성분야

사업단 현황			주요 연구 과제
지역	주관대학(참여대학)	분야	
합계 13개 사업단			총 134개 과제
부산	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한국해양대)	지역선도형 기계산업 분야	「자동차부품 소재산업 인력 육성」등 20개 과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산업자동화 및 정보통신 분야	「정보컴퓨터분야 인력양성 사업」등 5개 과제

사업단 현황			주요 연구 과제
지역	주관대학(참여대학)	분야	
대구 경북	경북대 (금오공대, 대구대, 영남대)	정보기술 분야	「전과 및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등 15개 과제
	영남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금오공대, 안동대, 상주대)	기계기술 분야	「기계산업 현장실습 및 공장형 실습장 운영」등 23개 과제
광주 전남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수송기계 분야	「LINK프로그램(현장실습)사업」등 10개 과제
대전 충남	대전산업대 (한국기술교육대, 배재대)	정보통신 분야	「지능형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등 5개 과제
	충남대 (공주대, 한남대, 순천향대)	정보통신 분야	「전기전자전과 인력양성사업」등 5개 과제
울산 경남	경상대 (인제대)	창의적 수송기계 분야	「창의적공학설계기술인력양성」등 6개 과제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분야	「기계시스템 인력양성사업」등 10개 과제
강원	강원대 (강릉대, 한림대)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분야	「정보기기 및 시스템」등 5개 과제
충북	충북대 (충주대)	정보기술 분야	「산업체맞춤교육시스템」등 20개 과제
전북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자정보 분야	「기초산학 교육사업」등 4개 과제
제주	제주대	신해양개발 분야	「해양생산과학 인력양성사업」등 6개 과제

□특화분야

사업단 현황			주요 추진 분야
분야	대학	전문대학원 사업단	
합 계 12개 사업단			
과학기술여성 전문연구인력 양성	이화여대	정보과학기술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학 기술 및 응용구조, 통신기반기술 개발 등 • 지식공학 중심 여성전문분야 인력 개발
디자인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디자인 교과과정 개발, 건축디자인 기술 개발, 도시환경 및 조경기술개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디자인 • 제품·자동차·시각 디자인 • 실내 건축 및 생활문화 디자인
영상	서강대	영상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미디어, 디지털영상, 광고PR • 컴퓨터애니메이션 및 게임제작, 미디어 제작 등
	중앙대	첨단영상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영상정보 기술 • 극영화 제작, 영상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단 현황			주요 추진 분야
분야	대학	전문대학원 사업단	
외국어 통역·번역	한국 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통역사 및 전문번역사 양성 • 통역 및 번역 분야 이론 정립
한 의 학	경희대	東西의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학 접목을 통한 치료기술 개발 • 한방치료 기기 및 신약 소재 산업분야 인력양성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의학 및 한의정보 표준화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한의학적 치료연구
자 동 차	국민대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독자설계 및 생산기술 확립 • 종합적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벤처경영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응용기술, 컴퓨터응용기술, 첨단산업기술, 벤처기술경영
정보통신석사 과정실무전문 인력양성	아주대	정보통신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통신 및 이동컴퓨팅, 실시간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번역시스템

* 정보통신석사과정실무전문인력양성분야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을 정보통신부 자금지원을 전제로 추가 선정

(李在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충남 정의여중·고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진상과약과 사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가 현장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폐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답 변)

- 학교법인 송죽학원의 학내분규로 인하여 정의여중·고의 수업 등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 고등학교이하 각급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도감독은 이들 학교들의 설립해산권이 모두 당해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져 있어
- 현재 충청남도교육감 책임하에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 우리부에서는 학생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

(질 의)
시국사건관련 미임용자의 해결책은?

(답 변)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에 대해서는 '99.9.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 '89.7.25부터 '90.10.7사이에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임용에서 제외된 122명으로부터 특별채용 신청을 받아 106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음

○ 또한 2000.1.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미임용자들로부터 특별채용 요청이 있어왔음

○ 우리부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①민주화운동관련자로 확정하고, ②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 우리부에 통보하여 오면 미임용자의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특별채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할 계획임

(질 의)
2002년 대입제도의 문제에 대한 수정·보완대책은?

(답 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I. 2002 새 대입제도의 의의와 추진배경

1. 새 대입제도의 의의

○중전의 암기·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획일적인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지·덕·체의 조화된 성장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임

2. 추진경과

- 대통령께서 대학입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실 것을 천명함 따라 관련부서 협동으로 그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98.4~7
- 연구진의 개선안을 토대로 사교육비대책위원회에서 논의 : '98.7.14
- 대학입학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집중작업 : '98.7~9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위원회에 심의·통과 : '98.9.16
-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개선시안 공청회 개최 : '98.9.18
-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확정·발표 : '98.10.15

3. 추진배경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암기위주의 학습에 의한 획일화된 인력은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존중되고, 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특기·소질·적성 등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도 '우수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초·중등교육이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

중전의 대학입학전형은 성적중심의 획일적인 방식

- 대학은 대부분 시험성적의 소수점 단위로 입학당락을 결정하는 획일적인 전형방식으로 학생을 선발
-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가능한 대

학을 서열화시키고 학생의 성적을 이에 대비시켜 진학지도

획일적인 전형방식에 따른 문제점

- 학생은 무한 학력 경쟁으로 무거운 학업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성적부진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비행문제가 발생
- 고액·과열과의 증가로 학부모는 과중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됨
- 고등학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보다 진학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
- 대학도 학생의 시험점수 수준에 따라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되어 특성화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II. 새 대입제도 기본원칙과 개선내용

1. 기본원칙

창의적이고 지·덕·체가 조화된 인재양성

- 대학 : 시험성적 우수자 선발관행에서 벗어나 점수화·석차화하는 방법은 가급적 자제하고, 대학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실시하여 학생의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
- 고교 : 입시·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 실현

2.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내용

가. 다양한 전형자료의 활용

1)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실시 금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실시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은 건학이념, 교육목표 등 각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전형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

○고교 학생들의 3년간 활동인 지(교과성적), 덕(품성·봉사·협동 등), 체(체력 등)를 종합기록하기 위하여 다매식으로 전환하고, 이의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 판단하도록 함

○대학은 교과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각종 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며,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단위의 성격에 관련된 과목 등을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

3)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98년 10월 발표내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사항>

기본전제

대학의 무시험 전형제 채택에 따라 이 시험의 점수는 최소자격기준으로만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여부 결정에 주는 영향력이 대폭 낮아지는 입학환경을 상정하고 제도개선을 검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행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

- 변별력 제고라는 이유로 도입된 소수점 배점은 석차화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폐지
- 총점위주로 석차화되지 않도록 총점을 폐지하고, 영역별 점수만 표시하여 모집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
- 등급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점수와 함께 등급(9단계)도 병행하여 제공

○기타 영역별 배점, 공통·필수과목, 문체은행 개발, 난이도 조절 등은 평가원이 책임지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별도 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시험성적 위주의 대입전형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 자격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여부 결정에 주는 영향력이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 수능 9단계의 등급을 제공하고 총점 및 소수점을 폐지하도록 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의 3개 영역을 언어·수리·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현실화하며

○2001학년도부터 수능시험에 선택과목으로 추가된 제2외국어는 새 대입제도에서도 계속 유지

※현행 수능제도와 비교

2000학년도	2002학년도 개선안
○주로 획일적 점수 반영	○자격기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
○3개 영역 (언어·수리·탐구·외국어)	○5개 영역 (언어·수리·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

2000학년도	2002학년도 개선안
○소수점 및 총점	국어)
○영역별 점수	○폐지
	○영역별 점수와 등급제 (9등급)

4) 면접의 활성화

○면접은 학력 이외의 인성, 가치관, 도덕성, 사고력, 지도력, 잠재력, 정의감, 협동심, 기초소양, 폭넓은 독서 여부, 의사표현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중요한 전형자료로 될 것임

○또한 학생이 제출한 각종 자료(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면접도 다양하게 시행

5) 컴퓨터 활용능력의 대입전형 자료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취득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들이 선택적으로 이를 활용

○정보소양인증 방법

- 인증방법1: 정규수업시간,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 방학특강 등 학교에서 컴퓨터 관련교과를 34시간 이상 이수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 인증방법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관시험 또는 국가·민간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증 받는 경우

6) 비교과 자료 적극 활용

○그밖에 교내 학생활동, 특별활동, 사회활동, 동아리활동, 취업경력, 경시대회 수상경력, 효행수상 경력, 각종 자격증, 추천서, 수학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비교과 자료도 자유롭게 활용

나. 특별전형의 활성화

○특별전형은 모집인원과 선발방법이 여러 줄로 나누어지므로 다원화 시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선발 방법에 가장 적합한 형태

○새 대학입학제도는 개별 대학에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별전형 유형을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권장

○특별전형에 의한 학생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사항이며

- 특정분야에 대한 수상실적·외국어 우수자·산업체근무 등 특기나 경력에 의한 특별전형과
- 특수교육대상자·농어촌 출신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소외계층 대상전형 등 차등적인 보상차원의 특별전형 등이 있음

다.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

- 새 대입제도에서는 대학이 학생을 연중 선발할 수 있음
- 시험성적 우수학생 유치경쟁으로 전략한 특차모집은 폐지

- 수시모집은 전형일정을 분산하여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여유 있는 전형일정 확보 등 대입전형 다양화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모집·예약입학·추가모집 등을 모두 포함

○ 연중 수시모집을 허용하더라도 3학년 1학기에 선발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특별한 학생을 예외적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

○ 정시모집은 4개군에서 3개군으로 축소되고 동일 군내에서 1개 대학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

<2001 /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모집시기의 주요 차이점>

구 분	현행(2001학년도)	개선안(2002학년도)
○모집구분 : 수시, 특차, 정시, 추가		→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
- 특차모집 : 특차모집 실시		→ 폐지
○수시모집 지원·선발·등록		
- 지원 : 합격자도 정시지원 가능		→ 합격후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 불가
- 선발 : 9월부터 학생선발		→ 3월부터 학생 선발 가능
※연중 학생선발 가능, 다만, 3학년 1학기에는 모집단위의 10%이내 조기선발 가능		
- 등록 : 기간을 두지 않고 선발		→ 1·2학기말에 각각 등록기간을 둠
○정시모집 구분·등록		
- 모집구분 : 4개군 (가, 나, 다, 라)		→ 3개군 (가, 나, 다)으로 축소
- 등록 : 동일군내 1개 대학만 지원		→ 현행방식 유지
※미등록 충원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관리 방안은 대교협이 연구 중에 있음		

라. 대학의 독자적 학생선발 방법 권장

-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목표 등 각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이 활성화됨
- 고교장 추천 뿐만 아니라 학급담임, 교과교사, 종교지도자, 자치단체장, 산업체 추천, 자기 추천 등이 다양하게 실시
- 전형자료를 일괄합산하여 선발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다단계로 전형하는 등 입학전형 방법이 다양화

19개 고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진단 실시하고 현장진단 결과를 토대로 2002 새 대입제도 세부시행대책(안)을 수립하여 부서별 시행과제 추진 중('99.8~2000.6.)

2. 2002학년도 수능시험 총점·소수점 폐지 및 9등급제 도입(2000.4.20)

- 시험성적 위주의 전형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점위주로 점수화, 석차화 되지 않도록 수능 총점과 소수점을 삭제하는 대신 '5개영역 종합등급'과 영역별 등급 제공
- 대학별로 수능성적을 활용하여 최저자격기준으로 설정하거나 영역별 반영을 하는 등 다양한 전형을 할 수 있도록 권장

III. 추진실적

1. '새 대입제도 시행준비단' 구성·운영

- 차관을 단장으로 준비단을 구성하여 고교현장의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19

등 급	1	2	3	4	5	6	7	8	9
비율 (%)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3.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특별전형의 개발과 확대 유도

구 분	'98학년도	'99학년도	2000학년도	2001학년도
특별전형 유형	45종	88종	152종	179종
모 집 인 원	59,156명	67,200명	78,954명	85,617명
총정원대비 비율	16.3%	18.7%	21.5%	22.8%

4. 새 대입제도 시행관련 대학별 준비 협조 및 2002학년도 입학전형사항 조기발표 유도('99.9~2000.5)

※서울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대 등은 2000.5월말~6월초에 발표완료

5. 새 대입제도의 이해와 협조 촉구를 위한 대국민 홍보추진

-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내 자료집」 제작·배포 ('99.2),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간 ('99.5)등 홍보관련 책자 발간
-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핵심 교원 연수 등 교원대상 연수실시
- 새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5개 권역별 학부모·교육관계자 심포지엄 개최('99.5~9) 및 지역 대학별(전국 18개 대학) 학부모 입시설명회 개최('99.10~11) 등 학부모 연수 실시
- 언론 기고 및 TV 프로그램 참여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99.2~2000.5)
- 학원관계자, 언론사 논설위원(2000.5.1, 5.3), NGO 대표(학부모 연대 등)와의 간담회 개최(2000.5.8) 등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6. 고교진학담당교사 및 주요대학 입학관리처장과 간담회 개최(2000.4.25)

IV. 추진상 문제점과 보완방향

1. 고교 현장의 '성적부풀리기' 문제

- 현황
 - 2002학년도 대입제도에서는 내신성적이 중요시되며, 절대평가(평가)만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학부모의 압력 또는 일부 교사의 쉬운 문제 출제 등에 의해 성적부풀리기 현상이 발생
- 보완방향

고 교

- 교사관리, 성적처리 등 일련의 평가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제 구축
- 학교 및 교과지도 실정에 따라 공동출제·난이도의 적정 조정 등을 교과협의회 또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과목별·단위별 목표, 평가의 내용·수준·방법 등을 사전예고

교육청

- 학업성적 적정처리를 위한 교원연수 지속적 실시
- 고교의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장학지도 및 부적성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추진

대 학

-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성적부풀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전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검토
- 학생부에는 절대평가 방식의 수,우,미,양,가 평어뿐만 아니라 과목별 계열석차가 동시에 기재되므로 대학에서 입학전형에 병행하여 반영 가능

※서울대의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안(2000.5.22 발표)에서는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시 교과목별 석차백분율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교과활동에 대한 평가가 불성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

2. 학교 현장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 현황
 - 수능의 난이도가 점차 떨어지고 등급제가 실시되면 변별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특별전형의 활성화로 학력저하 현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
- 보완방향

- 수능시험은 상위권 학생을 위주로 출제되는 시험이 아니라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임

- 고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기초학력을 충실히 다진 학생이면 풀 수 있도록 하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것임

- 수능 등급제가 시행되더라도 대학은 학생의 일정 학력수준 구비여부를 자격기준 설정 등으로 확인이 가능

- 특별전형이 활성화되어도 대학별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요구할 것이므로 한가지만 잘해서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기초학력의 구비는 필수적임

3. 경시대회 난립문제

○ 현황

-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는 특기자 특별전형의 활성화로 대학별 다양한 경시대회가 실시되어 학생의 경시대회 준비 부담 및 사교육비가 가중

○ 보완방향

- 경시대회를 분야별로 대학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공동 개최하도록 유도(동일 경시대회는 권역별로 2~3개만 개최하고, 대학들이 상호협약하여 주관대학을 설정하도록 함)

-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경시대회에 참여하기 보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고 참여하도록 장학지도 강화

4. 추천제 전형 확대에 따른 추천의 공정성 문제

○ 현황

- 추천제 전형 확대에 따라 추천서 대리작성, 추천을 둘러싼 치맛바람 발생, 추천권 남용 등 문제 발생 우려

○ 보완방향

- 고교별로 추천의 기준이나 내용을 학교별 사정에 맞게 명확히 마련하고, 추천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지도

- 정부는 추천기준과 절차에 대한 예시를 담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등을 고교에 배포

-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추천관리위원회 등 추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내 기구에서 추천기준과 절차를 심의하고, 추천과정 및 최종 결과를 공개하여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지도

- 대학에서도 추천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추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서울대 2002 신입생 선발방안(2000.5.22) 발표 내용 중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인 실명제’를 도입하고, 추천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대리 작성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사항을 명시

(질 의)
이전 예정인 국립보건원 자리에 기술전문대학을 설치할 용의는?

(답 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는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관련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제1항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불가”

* 동법 시행령 제10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말함

* 과밀억제권역(동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1])

- 서울특별시 전역

※국립보건원은 서울시에 소재(은평구 녹번동 5)하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薛 勳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법정시간 대비 비교 제출

(답 변)

○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헌법 제4조 및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전 교과에서 걸쳐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도덕과·사회과 등에서 집중 지도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심도있는 통일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은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합하는 경우에 교과상의 통일교육 법정시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사료됨.

※교육과정에 할애된 통일교육 연간 시간

학 급 별	제 6 차 교육과정	제 7 차 교육과정	비 고
초등학교	49시간	53시간	1시간은 40분
중 학교	47시간	48시간	1시간은 45분
고등학교	43시간	49시간	1시간은 50분
계	139시간	150시간	

○교육과정상 통일교육 법정시간 배정은 없으며, 다만 통일교육 관련소재(자료)를 교과별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할 따름임.

□별첨 : 1.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6차, 7차) 비교

2. 교육과정별 통일교육의 특징 비교

[별첨1]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6차, 7차) 비교

학교 급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강조 사항
초 등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인식과 통일 필요성 •민족문화 유산 아끼기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평화 통일의 방법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국가·국화 사랑하기 •분단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인식 •민족문화 유산 애호 및 남북한 문화 교류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국가 발전에의 협력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통일 국가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에 대해 관심 갖기 •북한동포 이해하기 •통일의지 고취
중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통일 안보 생활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의지의 고양 •민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바로 알기 •안보의지와 평화의지의 균형적 배양 •통일 준비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강조
고 등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민족 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 및 통일 한국의 모습 •통일 대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통일정책의 바른 이해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이상의 비교는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를 단순하게 비교한 결과로서 향후 새 교과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며,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게 될 것임.

[별첨2]

교육과정별 통일정책의 특징

교육과정	고시연도	통 일 정 책	내용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방공교육 별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교육과정	고시연도	통 일 정 책	내용특징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화해·협력교육 민족동질성 회복교육 통일대비교육
7차	1997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대북 포용정책)	

(金德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학교붕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 변)

- 교실붕괴 현상은, 우리 교육이 당면한 매우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 교실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나,
 - 우선, 현 교육이 대입수능시험 준비에 치중하 나머지, 학생의 수업태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한편, 학교교육보다 학교 밖의 과외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등으로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봄.
- 앞으로 2002년 새 대입전형에서는 학생의 수업태도, 생활상태 등 학교 내 모든 교육활동 내용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는바, 그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유도할 것임.
- 또한, 향후 5년간 교육여건 개선, 교원증원, 담임수당의 연차적 인상,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시책을 펴, 교원의 사기진작과 권위회복에도 주력할 것임.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사학법인의 경우 관련 친인척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 현행법상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각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사립

학교법 제21조제2항)

- 그러나,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총장, 처장 등의 주요 보직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의 친인척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친인척의 보직 독점 등 부작용이 일부사학에서 발생하고 있음
-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운영 관리체제 전반에 관하여 연구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任鍾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교육세를 영구세화 하고 증세 하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제출 바람

- 우리부에서는 교육의 미래모습에 대한 국민의 전망과 바람을 조사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9.12.10~15까지 일반국민 1,010명, 교사 420명, 중·고·대학생 627명, 그리고 여론선도층 300명 등 총 2,35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결과, 21세기 사회의 최고 가치는 「건강」과 「좋은 교육」을 꼽았으며
 - “교육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일반국민과 학생들은 70% 이상이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고 보며 교사와 여론선도층은 국내총생산 대비 4.3%인 '99년도 교육예산이 너무 적다고 나타나는 등 최소한 GDP 대비 6%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우리 국민들은 교육예산 증액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세금을 감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

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한 비율보다 다소 적은 77.5%의 일반국민이 '얼마든지 또는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이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지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또한 우리 나라는 적은 돈으로 많은 학생들을 대량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19세기 초기산업사회의 교육여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 학급 과밀현상이 가장 심각한데도, 그 동안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한 나머지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활동이 강조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2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없어, 대통령께서 2000년 1월 3일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여는 신년사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여건을 2004년까지 OECD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하셨으며

- 정부는 우선 2004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이하, 고교는 40명 이하로 줄이는 한편, 주거환경보다도 못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임.

○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2004년까지 초 35명, 중 35명, 고 4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1,191개의 학교를 신설하며, 여기에 약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함.

- 일반회계 국가 예산의 묶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세의 증세를 통하여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이 불가피함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에게도 홍보 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을 계획임.

(질 의)

올해 예산 증가분 9천억원 중 8천억원이 인건비인데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답 변)

○ 교육예산(19.2조원)의 83.7%(16조원)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는 내국세의 11.8%인 경상교부금(5.9조원), 의무교육 교원의 봉급교부금(2.8조원), 교육세(5.9조원), 재정융자금(1조원), 증액교부금(0.3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교육예산은 내국세와 연계 및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교육예산도 직접적으로 증감되고 있음

○ 지난 '98년 이후 경기침체로 교육재정도 급격히 감소되어 공무원의 인건비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음.

○ 2000년 교육예산중 인건비 증가비중이 특히 높은 것은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가계보조비로 부활하고, 기본급 3% 인상, 가족수당 인상 등 인건비 인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아 부족분은 교육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증가된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음.

※ 2000년 인건비 증가 내역

- 국·공·사립교원 및 행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인한 소요액 증액분임

- 처우개선 내역('99년 → 2000년)

• 기본급 3% 인상

• 가족수당 : 배우자 15천원 → 30천원(월)
존비속 15천원 → 30천원(월)

• 담임수당 : 30천원 → 60천원(월)

• 가계보조비 : 월급여액 125% → 250%

(田溶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명퇴한 교원수는 몇 명이고 다시 시간제 강사 등으로 교단에 복귀한 교원수는?

(답 변)

○ '99학년도 - 2000학년도 1학기 퇴직교원

연도	구분	정년퇴직			명예퇴직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99	2월	861	638	1,499	5,710	2,311	5,710	6,571	2,949	8,021
	8월	4,274	4,089	8,363	5,045	2,044	5,045	9,319	6,133	7,089
	계	0	0	0	0	0	0	0	0	0
2000. 2월		491	591	1,082	2,755	1,343	2,755	3,246	1,934	4,098
계		5,626	5,318	10,944	13,510	5,698	13,510	19,136	11,016	19,208

－중등의 경우는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풍부하여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교원을 신규교사 임용으로 충원함.

－초등의 경우는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부족하여 신규교사 임용, 중등자격자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활용과 함께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활용하였음.

○초등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99학년도 연인원 : 3,769명 (1학기 794명, 2학기 2,975명)

－2000학년도 1학기 : 2,201명

(질 의)

현정책을 유지할 때 명퇴에 따른 재원부담은 얼마나 되고 신규임용이 되지 않으면 교사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 변)

○교원정년단축 이후 '99학년도와 2000학년도 1학기까지의 초·중등교원 명예퇴직인원은 초등 13,510명, 중등 5,698명 총 19,208명임. 이들의 연금 및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재정에서 부담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였음

－명예퇴직수당 예산액

• '99학년도 : 2,065,975백만원

• 2000학년도 : 1,385,014백만원(예정금액으로서 2학기 4,478명분 포함)

○퇴직교원발생에 따른 교원충원은 중등의 경우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풍부하여 신규교사임용시험을 거쳐 충원하였으며, 초등의 경우는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부족하여 신규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중등자격소지자 초등기간제교사 6,200여명을 선발, 임용하였으며, 퇴직교원중 건강과 교직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매학기 활용하였음

○2000학년도 2학기 명예퇴직예상인원은 초등 2,444명, 중등 2,034명 계 4,478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명예퇴직 수당은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소요금액은 앞의 2000학년도 명예퇴직수당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음

－퇴직교원 충원대책은 중등의 경우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풍부하여 기존 신규교사임용시험

으로 선발, 임용대기자로 충원할 것이며, 초등의 경우는 예비교사 양성자원이 부족하여 퇴직교원 5,118명을 초빙기간제교사로 활용할 계획임.

○2001학년도부터는 초·중등교원 공히 퇴직교원을 교대·사대의 예비교사 양성자원으로 충원이 가능하며 교원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趙富英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OECD 국가간 교육현황 비교검토 자료 제출 (교육환경비교)

(답 변)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 졸업인구 비율은 대부분의 회원국 중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해 OECD 국가중 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등학교 졸업생 중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이 84%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의 2배가 넘음.

○이렇게 높은 학력수준에 비해 정부의 공교육투자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교육수준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999년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 공교육에 대하여 민간 및 정부가 부담한 공교육비는 GDP의 7.3%로 OECD 국가중 투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부담 공교육비 투자는 GDP의 4.4%에 그쳐 OECD 평균인 5.1%보다 낮고, 반면, 사부담 공교육비는 OECD 국가중 최고를 기록함. World Bank-OECD 보고서(2000. 6월 초안)에서는 낮은 공부담 공교육비 투자가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초래했다고 분석함

○현재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World Bank-OECD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공교육비의 사부담이 높은 데 대하여 공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 공부담 공교육비의 증액을 권고함

<별첨자료>

OECD 국가별 교육환경 수준 비교

(자료 : "Education at Glance OECD Indicators 1999" p. 43~p.68 요약, 2000. 4. 발간)

1)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단위 : %)

구 분	공부담공교육비	사부담공교육비	공교육비
국가평균	5.1	0.76	5.8
한 국	4.4	2.94	7.3
독 일	4.5	1.16	5.7
일 본	3.6	1.17	4.8
프 랑 스	5.8	0.40	6.3
영 국	4.6	m	m
미 국	5.2	1.70	6.9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 : USD)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국가평균	3,463	3,851	4,791	5,790	7,295	8,434
한 국	1,676	3,308	3,374	3,652	4,346	8,512
일 본	3,096	5,202	5,512	6,314	7,750	10,623
독 일	4,288	3,490	4,652	9,322	5,623	10,083
영 국	5,312	3,206	4,609	×	×	8,169
미 국	6,158	5,718	7,230	×	×	17,466

3) 교사1인당 학생비율(단위 :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가평균	15.5	17.1	14.9	15.1
한 국	23.6	31.0	22.5	23.1
일 본	19.3	21.4	17.3	14.4
독 일	23.2	21.6	16.3	13.6
영 국	21.5	22.0	16.7	16.7
미 국	18.0	16.5	17.1	14.7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

(金貞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거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단순 다수득표자로 하는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견해는?

(답 변)

-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당선자 결정 문제는 금년 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확정된 제도로
- 개정법률에 의해서 교육감선거를 한번도 실시 하지 않았음

○ 금년 7~8월중 4개 시도(충남, 전남, 서울, 전북) 교육감 선거가 있으므로 선거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 동법의 개정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 의)

사학분규와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에 대해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지 밝혀주시요

(답 변)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충남 정의여중·고 관련 분규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

1. 분규배경 및 원인

- '87년도 당시 송죽학원 이사장의 전횡에 대한 불만으로 '88년도에 최초로 재단비리척결을 요구하며 학생들을 동원하여 분규를 야기함 → 관선이사 파견으로 분규 종식됨
- 이사장 김옥선의 전근대적인 학교운영과 인사문제를 통한 금품비리에 교사들의 불신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재정부분 미 공개와 인사불만 증대
- 장항읍 소재 정의여중 교사 4명이 2000.3.1자로 동법인소속 학교인 원의중학교(보령시 원산도 소재)로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분규가 발생함.

2. 분규경과

- 2000.2.25~3.29 교사들이 교장실을 점거하며 교내농성을 시작(전교조에서 가담)으로 서천교육청 및 도교육청 농성 실시
- 2000.3.30~4.22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3.29)로 농성교사와 학부모대표간에 합의서 작성을 통해 3.30일부터 수업이 정상화 됨 (교원징계 재심위 청구 기각)
- 2000.4.24~5.10 원의중에서 철수한 4명의 교사가 주도하여 농성 시작하였으며 농성교사 중 12명 직위해제, 발령불응한 4명교사는 파면통보함
- 2000.5.12~5.22 현재 전교생 수업 및 등교거부하며 시위농성을 계속 중이며, 12명에 대한 징계(파면10, 해임1, 정직1)
- 2000.5.27 정의여고 교사 징계(직권면직16)
- 2000.5.30 이사장 성명서 및 교육감 담화문 발표 (폐교계획 및 수업정상화 방안)

3. 정의여중·고 폐교계획 및 수업정상화 대책(충남교육청)

- ▶ 정의여중·고 폐교 (2001.2.28자)
 - 충남교육청에서는 정의여자중·고등학교의 학내문제와 관련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학교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 그러나 분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되고 학생들의 수업과행은 계속됨.
 -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에서는 재단측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던 중 이사장 김옥선이 사태 해결은 정의여중·고를 폐교하는 길 밖에 없다고 스스로 판단, 정식으로 폐교 의사를 전달하였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폐교를 수용하기로 함
(충남교육청 행정지원과장과 폐교에 대한 합의서 작성, 2000.5.27)

▶ 향후 추진계획

- 이사회 의결 등 폐교절차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 재산처리는 학교설립자인 이사장이 재산환원을 희망하지 않음으로 송죽학원의 수익용 또는 교육용재산으로 남도록 조치할 예정임.
- 학생수용 대책으로 정의여중은 폐교와 동시에 학기에 맞추어 장항중으로 전원 편입하고, 정의여고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폐교 전이라도 희망하는 학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교직원 처리는 사립학교법인협의회충남도회와 협의하여, 다른 사립학교로의 채용을 적극 주선할 계획임.

4. 교육부의 입장

- 현재 국가차원의 사학정책의 수립·제도개선 등의 업무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도·감독 등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
- 송죽학원 사태는 학교법인과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로써 선량한 학생들이 불모가 되어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면에서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학생수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임.
- 현재로는 학교법인측과 농성교사간에 감정상 대립이 극한 상태로써 현지에서는 폐교결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바, 향후 수업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충청남도교육청 책임하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될 것임.

(李在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북한, 반공교육에 대한 재정립 및 재교육이 시급하며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답 변)

- 교육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2000년6월17일 학계, 관계부처,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일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될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시행이래 교육부가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일교육의 기조로 추구하여 왔고
- 이를 기초로 하여 수립된 2000학년도 통일교육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 기본방향,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일부 지도요소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내용상에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문장표현이나 부적절한 용어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6월23일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고 수정·보완된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일선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향후 통일교육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음.
- 또한 금년 10월중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CD-ROM타이틀을 개발하여 전국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과서 위주로 지도되던 통일교육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실천·체험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임
-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제6차)의 부적절한 부분은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자료를 마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선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며,
-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교과서는 화해·협력·평화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회복,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고한 안보의식에 기초를 둔 민주시민의식 등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임.

(질 의)
 향후 통일교육을 위한 역사연구나 자료수집 등 교육부문에 있어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계획이나 대책은?

(답 변)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인적2000년7월4일 물적 교류·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우리부에서는 정부의 기본방침 내에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맞추어 교육부문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사업을 이념이나 체제와 무관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선정·추진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 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교육부문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동 사업 추진에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과장급으로 구성된「교류·협력 추진 팀」과 민간 및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교류·협력정책 자문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

(질 의)
 고액과외는 공교육 부실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대책은?

(답 변)

- 과외전면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고액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액과외 교습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그리고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액에 대한 기준 설정이 불가피함
 - 그러나 고액기준에 대한 개념은 과목별, 지역별, 학교급별, 학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 기준을 높게 정할 경우 과외비의 전반적인 인상 효과를 초래하며 낮게 정할 경우 범법자 양산 등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가 큼
 -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고액과외의 기준설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됨
- 또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조세주의에 따른 세금부과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에
 - 교습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학부모 명단 공개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학습활동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현재 학계, 언론계, 법조계, 학부모, 교원, 교원단

체 대표 등 각계인사 등으로 과외교습대책위원회 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림.

(질 의)

교육부총리의 도입과 함께 “청소년정책국”을 교육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추진의향은?

(답 변)

- 청소년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우리부에서는 '99.3월 정부경영진단 및 '99.5월 정부조직 개편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정책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 특히, 금번 6월26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교육부총리제 신설 등 정부기능조정 방안에서도 청소년 정책기능이 일원화 되지 못하고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음
- 앞으로 교육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되면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합리적으로 연계·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성과를 보가며 추후 청소년정책 관장 문제를 거론할 계획임

(질 의)

작년 국감 이후 지금까지 교실붕괴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실적 및 정책연구결과 등 구체적인 자료제출

(답 변)

- 작년 국감 이후 교육부에서는
 - '99.11.2 광주광역시에서 '교실붕괴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 '99.11.10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현직교원, 전문가,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하여 '학습분위기 쇄신 대책 수립을 위한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99.11.12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장관, 차관을 비롯한 실·국·과장 등 30명이 '교실붕괴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을 하였으며,
 - '99.11.26-27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현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99.10-12월까지 2개월 동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으로 하여금 '학교붕괴(학급붕괴)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하여 '99.12월 정책연구를 완료하였음.

○ 2000.2.23일 '2000년도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면서 '학교붕괴(학급붕괴) 예방 및 대책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음

※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연구 관련 보고서는 분량이 많아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질 의)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관리2공단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교육시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98.4.10 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부 주관으로 「현행교육시설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연세대 백준홍 교수, '98.5.1~'98.9.20)을 시행한바 있음
- 본 연구결과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를 '98.9 개최하였으며 교육부 실무검토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시설업무체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정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98.12 교육시설공단 추진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음
- '99.4 시설공단설립이 다시 논의되어 '99.5 시설공단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99.7~'99.8 시·도교육청 여론수렴 결과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 '99.9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서 1차 통합운영 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수정되었으며, 우리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학교시설업무 체계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기술업무를 통합운영 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일선학교 소규모 보수공사 등 업무는 존재하면서 지역교육청 시설직 미배치에 따른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2000.5.27. 각 시·도 부교육감 연찬회에서 금년 중 동 업무를 완료토록 지시하는 등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하겠음

(질 의)

‘99년11월 대비 노후학교시설물(D급, E급)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개·보수 되었는지?

(답 변)

○‘99.11기준으로 노후학교시설물현황은 E급 20건, D급 112건 총 132건이며, 2000.6 현재 E급 7건, D급 18건 총25건에 103억원을 투자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미 조치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임

○그러나 노후시설물은 대부분 ‘60~‘70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서 구조적인 내구년수가 도래되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우리부 에서는 노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물은 전담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 중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노후시설물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위험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음

(질 의)
 지난해 수해로 인한 학교시설물의 피해복구 예산규모와 그 중 학교시설물 노후로 인한 사례건수와 피해규모, 올해 장마에 대한 수해대책 과 추진실적은?

(답 변)

○‘99년도 수해로 인한 학교시설물의 피해복구 예산규모

(단위 : 개교/천원)

시·도 교육청별	학교수	피해복구 예산규모	비고
서 울	6	88,260	
부 산	-	-	
대 구	-	-	
인 천	2	59,216	
광 주	1	37,706	
대 전	1	3,540	
울 산	-	-	
경 기	16	658,102	
강 원	9	542,286	
충 북	4	42,496	
전 남	11	248,891	
전 북	16	308,131	
전 남	63	1,448,837	

시·도 교육청별	학교수	피해복구 예산규모	비고
경 북	3	224,932	
경 남	33	1,490,240	
제 주	10	227,284	
합 계	175	5,379,921	

○학교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사례건수와 피해규모
 - 학교시설물의 피해사례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이므로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피해건수를 별도로 분류 파악하기는 곤란 하며, ‘99년도 전체 피해규모는 175개교임

○2000년도 장마에 대한 수해대책과 추진실적
 - 2000년도 방재집행계획 수립, 시행(‘99.12월)
 - 2000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2000.3월)
 • 전국의 E급 재난위험시설 관리 실태 등
 - 2000년도 “방재의 날” 행사 실시(2000.5.25)
 - 여름철 수해방지대책 철저(국무총리지시사항) 공문시행(2000.6.15)
 - 2000년 여름철 호우·태풍 등 재해대책 추진계획 수립, 시달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산하기관 등(2000.6.21)
 • 재해예방 안내 “리플렛” 제작 배포(25,000부)
 - 교육부 재해대책반 구성, 운영 : 2000.7.3-8.31(2 개월)

(질 의)
 사학비리 대책으로 ‘사학비리특별감사반’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는?

(답 변)

○사학분규 및 비리의 원인이 복잡하고 교육부의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음
 ○사학 분규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적극적인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분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연중 사학비리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법인 및 대학에 관련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음
 ○또한 “사학분규해결방안 및 사학의 자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물을 종합하여 사학분쟁 전담기구의 법정화 등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음

(질 의)

교육부는 경인여대에 대하여 최근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육부의 감사결과는 무엇이며 정상화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 교육부는 경인여대 소요를 조속한 시일에 수습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6.7부터 6.17까지 10일간 감사를 하였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에 설치된 감사처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그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질 의)

시국사건 미 임용자에 대하여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임용발령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사례를 수집할 의향은 없는지 밝히기 바람.

(답 변)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에 대해서는 '99.9.2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 '89.7.25부터 '90.10.7사이에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임용에서 제외된 122명으로부터 특별채용 신청을 받아 106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음
- 2000.1.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미임용자들로부터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음
- 우리부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①민주화운동관련자로 확정하고, ②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 우리부에 통보하여 오면 미임용자의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특별채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하겠음
- 정부 차원에서 임용발령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사례 수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및 교육대학 졸업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특별채용을 신청하여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제출한 사

례를 수집 정리하여 조치할 생각임

(鄭昌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고액과외 문제

(답 변)

- 우리부는 지난 4월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규정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액과외 문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우리의 교육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간다는 자세로 보다 본질적인 교육정책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의 과외욕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과외욕구의 근원적 해소는 공교육의 내실화에 있다고 보고, 초·중등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자료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2002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 또 7차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시행하여 교육의 방향을 교사중심의 암기위주 수업에서 조사·토론 활동을 중시하는 학생중심 수업으로 바꾸어 나가고,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국가책임지도제 시행,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여, 과외욕구를 최대한 학교내로 흡수하고자 함
- 그리고, 농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EBS, 위성방송 활용 등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과외허용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해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한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합니다. 향후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육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의)

대학교 학부제 실시의 문제점

(답 변)

- 학부제는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학문영역의 통합을 통해 교육과정의 중복편성 및 학생들의 학문경험 및 전공선택 기회 제한을 해소하고 학문간 공동연구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된 것임

-모집단위 광역화 : 4,056 모집단위 ('98)→ 2,797 모집단위 ('99)

- 학부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대학이 대학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거쳐 구성원의 합의하에 점진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도입·시행함으로써 전공별 학생편중,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및 학생지도 곤란, 교수간의 전공이기주의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학부제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학부제 도입 이전부터 상존해오던 문제들과 중복되기는 하나, 대학이 자율적·주도적으로 학부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도 대학들의 자발적인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

(답 변)

- 지난 5.23 대학을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교수·교직원에 대한 인사를 파행적으로 운용하고, 등록금을 과다책정, 학교비를 부당하게 유용·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이사장(남편), 학장(처), 기획실장(아들)을 무조건 퇴진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함
- 당일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결성되고 학생들이 학장실과 행정실을 점거, 학사행정이 마비된 상태에 있고,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우리부에서는 양측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속한 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6.7~6.17까지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동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원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임
- ※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학내분규 사태에 관한 자료 별첨

<학내분규 대학 현황>

(질 의)

경인여대 분규사태의 내용, 결과 및 향후대책은? (전국 대학교 및 대학의 학내분규 사태에 관한 자료 제출)

I. 임시이사 선임 법인현황

법 인 명	최초선임일자	이사장	임시이사 선임 사유
영남학원(영남대)	'89.2.15	최재호	박근혜 이사장 취임 반대 및 학원민주화 요구 등 학내소요
서원학원(서원대)	'99.3.3	이해동	최완배이사장 선임 이후 인수계획 이행 등의 문제로 교수·학생 등이 시위·농성·집회를 하는 등 법인 및 학교의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법인 및 학교자금의 불법횡령 등 위반사항이 적출
조선대학교(조선대)	'88.2.4	조철현	이사장 박철웅의 독단 운영에 따른 학원소요
상지학원(상지대)	'93.6.4	문선재	이사장 김문기의 부동산 투기 및 학교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과 관련 장기간의 학내소요
동원육영회(한국외대)	'98.7.18	변형운	설립자 미망인 이숙경 이사장과 이종조카인 박승준이 사간의 법인운영상의 갈등 및 이사회 허위개최 등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 적출
영광학원(대구대)	'94.2.22	이상희	전 총장 이태영의 미망인 고은애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구성원간 갈등
단국대학교(단국대)	'98.4.15	장충식	부당 단기차입 및 학교회계자금 부당차입 등으로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이르고 사회적 물의
한성학원(한성대)	'97.12.23	김채운	설립자('79년 작고)의 부인과 자녀들간의 갈등으로 법인 이사회 기능이 마비

법 인 명	최초선임일자	이사장	임시이사 선임 사유
광운학원(광운대)	'97.2.14	이세중	전 총장 조무성(설립자 차남)이 임시부정사건으로 도피중(미국)에 가족간의 학원운영 갈등
아신학원	'97.7.25	이재근	종합감사 결과 이사장 김광아의 교비 45억원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 적출
오산학원(오산대)	'99.2.19	김하준	설립자 가족간(처 : 전금련, 자 : 신명수)의 갈등으로 이사회 기능 마비
세방학원(서일대)	2000.2.16	김득수	종합감사 결과 교육용 기반재산 부당매입 등 위법·부당 사항 적출

1. 학교법인 영남학원(영남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박정희 대통령 서거후 학생 및 일부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 가족(박근혜측 이사)의 학교 운영 포기 및 이사진 퇴진 요구
- 박근혜씨가 학생소요로 이사장직 퇴진 ('80.10.18 이사직만 보유)

□경 과

- '88.11.10 이사 전원 사퇴결의로 이사회 기능 마비
- '89.2.15 임시이사 7명 선임
- '99.4.14 임시이사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교수협의회, 동창회 및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임시 이사진의 고령화, 장기 재임에 따른 법인의 사유화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진 교체를 요구
- '99.7.5 영남대 총장인 김상근이사를 제외한 전원을 해임조치하고 최재호 등 6인을 임시이사 선임(이사장 최재호)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개입(유입)

□현 상황

- 새로운 이사진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반응이 긍정적임
- 동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영남종합금융(주)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받아 금감위의 관리상태임(2000.5.24)

2. 학교법인 서원학원(서원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92.8월 강인호 전 이사장(설립자의 자)이 약 200억원의 부채 발생 후 해외 도피함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으며,
- 동 이사회에서는 '96.4.30 「법인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와 각급 학교장이 선정한 서울산업

(주) 최완배 회장을 이사장으로 영입

- 그러나, 최완배 이사장 취임('96.5.14) 후 서원대 총장 선임과 등록금 압류 등의 문제로 학생 수업거부 및 교수 농성 등 학내문제가 발생

□경 과

- '99.1.25 우리부의 감사 결과 최완배 이사장 등 이사진이 영입 당시 약속한 부채상환 및 인수 계획 미이행, 학교자금 불법 횡령 또는 유용 등이 적출
- '99.1.25 임시이사 7명 선임('99.3.3)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개입(유입)
- 2000.3.17 신임 총장으로 김정기(서원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선임
- 임기 : 2000.3.17 - 2004.3.16

□현 상황

- 이사회와 총장이 긴밀한 협조하에 정상화 방안 추진 중
- 법인경영자영입추진위원회 구성 : 김진기 총장 등 6인
⇒법인 부채 : 약 270억원
☞이사회에서 법인경영에 참여할 새 이사장 희망자 공모 중 : 2000.6.19

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조선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초대 이사장이며 전 총장인 박철웅씨의 장기 간에 걸친 학교운영 독점에 따른 각종 부정·비리 등으로, '87.5월부터 학교구성원 및 외부로부터 불만야기 및 이사진 퇴진 요구로 분규 발생

□경 과

- '87.5 박철웅 총장 퇴진과 대학의 도립화 등 요구 소요 발생

- '87.11.30-12.15 교육부 종합 감사 실시
- '87.12.26 박철웅 총장 사임('99.1.8 박철웅 전 총장 사망)
- '88.2.4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 '94.12.23 임시이사 교체 : 잔류 3인 및 5인 신규 선임
- '99.11.10 양형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개입

□현 상황

- 양형일 총장 및 새로운 임시이사 선임 이후 학교 운영이 안정적임
- ↳'99.7.22-7.23 대통령 지방순사에서 지역유지와의 대담에서 교육부 장관이 조선대 시립화 의견 개진⇒광주광역시에서 반대의사표시⇒조선대 교수협의회 반대의견 성명('99.7.27)

4. 학교법인상지학원(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93.3월 김문기 이사장이 부동산 투기 및 학교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누적되어 온 학내문제가 표출되면서 학내소요 발생으로 임시이사 선임

□경 과

- '93.6.4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이사장 김상준)
- '93.8.31 이사회에서 교수선출에 의한 김찬국 총장 임명
- '95.11.8 이사 7명이 사표를 제출하여 임시 이사진 개편
- '97.8.29 김찬국 총장 재선임
- '99.7.29 김찬국 총장, 이상희 임시이사장, 김문기 전 이사장을 장관실에 초치하여 정상화에 대한 의견청취
- '99.9.22 김찬국 총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 '99.10.14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수감
- '99.10.22 한완상 총장 취임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개입

□현 상황

- 한완상 총장 및 새로운 임시이사진에 대한 학내 반응이 긍정적임
- ↳임시이사 선임 후 학원이 정상화 되었으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요청하는 김문기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수협의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

5. 학교법인동원육영회(한국의국어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이숙경 전 이사장이 '98.2.14 박승준 이사의 재임 중 과오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취소를 요청하였다가 '98.4.2 철회요청
- 조규철 총장직무대행 등 학내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이사진 총사퇴 요구
- 우리부에서 동 법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허위개최 등 사립학교법 위반사항 지적

□경 과

- '98.1.7 이숙경 이사장이 직접 법인업무를 주도할 것을 천명하며 박승준 이사의 전무이사직(자체통용) 해임
- '98.4.9-4.22 교육부 특별감사실시
- '98.7.18 임시이사 선임('98.8.13 이사장 변형운 선임)
- '98.8.24 조규철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
- '98.10.19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000.5.4. 이숙경 행정소송 취하로 종결
- '98.12.17 이사회에서 사무직원 70명, 교수 19명 징계 - 중앙노동위 및 교원징계재심위의 결정으로 복직 등 민원사항 해결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개입(변형운 이사장 유임)

□현 상황

- 새로운 임시이사진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며, 안정적 분위기 유지
- ↳설립자 가족과 이해관계인들의 학원정상화에 대한 의견합치 후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6. 학교법인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이태영 총장이 '88.10월부터 신병치료차 미국에 장기체류함에 따라 학교 및 법인의 지도력 부재 및 구심점 상실
-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을 이행치 못했으며, 학원소요에 대한 이사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정상화 의지 부족

□경 과

- '88.10.5 이태영 총장 신병치료 위해 도미('95.11.30 이태영 전 총장 사망)

- '93.6.29~7.14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 '94.2.22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7명 선임
- '96.2.7 박윤훈(경희대 교수)을 총장으로 선임
- '97.10.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 권고 의견표명
 -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문제는 유보적인 입장임을 회신함
- '99.12.2 윤덕홍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가입

□현 상황

- 새로운 임시이사진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며, 안정적 분위기 유지
 - ↳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이해관계인 대부분이 희망하나, 설립자측과 이해관계인들의 학원정상화에 대한 의견합치 후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7. 학교법인단국대학교 (단국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학교법인의 부당 단기차입 및 법인의 학교회계자금 부당 차입 등으로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이르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

□경 과

- '98.1.31 관할청의 허가없이 조성한 사채 등 변제 지시
- '98.3.6 서울은행 한남동지점에서 최초부도(166억 9천만원)
- '98.3.9~3.22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 ※ 지적사항 : 관할청 허가없는 단기차입, 법인의 학교회계자금 부당차입, 회계의 지출방법 부당, 서관 신축공사 선급금 지급 부당 등
- '98.4.15 장충식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취임승인 취소
 - ※ 장충식 이사장에 대하여는 정상화기간 1년 이후 조치 통보
- '99.4.10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화기간 1년 연장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가입
- 2000.4.15 학내구성원의 청원으로 이사장의 정상화기간 1년 재연장
 - ※ 현 부채액 : 2,410억원(2000.3) ← '98.3월 당시 2,562억원

- 부채상환 실적 : 152억원 ⇒ 논현동 등 부동산 40만평의 토지처분, 자체개발 및 임대분양 계획 검토 중

□현 상황

- 새로운 이사진에 대한 학내 반응은 긍정적임
 - ↳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중단상태이며, 현대건설 등과 공사재개 협의 중 ⇒ 용인 신 캠퍼스 공사 현황 : 토목 공사 68%, 건축공사 32%

8. 학교법인한성학원(한성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90년도에 임시부정 사건으로 설립자의 미망인이자 당시 이사장이던 이희순(78)이 실형을 선고받고 이사장직을 사퇴한 이후,
- 장녀(김옥자)와 만사위(서정희)를 중심으로 법인(학교)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차녀(김인자) 및 4녀(김경자)가 이희순과 연합하여 법인 운영권을 둘러싼 가족간의 갈등으로 분류 야기
- 우리 부 종합감사('97.12.5~12.13) 결과 '94년 이후 이사회 개최 없이 회의록만 작성하는 허위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임시이사 선임('97.12.23)

□경 과

- '97.12.23 임시이사 선임(이사장 박병호, 전 서울법대 학장)
- '98.7.5 박병호 이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해임하고 차인석 이사장 취임
- '99.2.2 전 이사장 이희순이 학술연구지원국장을 방문하여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
- '99.4. 한성여중 김태정 교감 직무대행 면직 부당(인사위 심의 미필) 등을 사유로 한성여중 교사 16명이 임시이사 퇴진 요구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가입

□현 상황

- 새로운 이사진에 대한 학내 반응은 긍정적이며, 학교 운영은 안정적임

9. 학교법인광운학원(광운대)

□임시이사 선임 배경

- '93년도 대학 입시 부정사건에 관련된 당시 광운대 총장 조무성(설립자의 2남)이 미국으로 도피한 후
- 조무성의 일방적인 법인 및 학교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설립자 유가족(형제·자

매 3남 5녀)들이 불만을 표면화 시키면서 조무성 측근 구성원들과의 상호불신으로 갈등 지속(법인 파행운영)

□경 과

- '96.3.29 이사회에 불법 운영 및 결의 무효 주장(설립자 3남 이사 조인성)
- '96.7.26 이사회('96.3.25) 결의 무효확인 판결 및 이사장 직무대행(강준길 이사 겸 총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 '97.2.14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 (7명)
- '97.10.2 박영식 총장 취임
- 2000.1.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진 개입

□현 상황

- 박영식 총장 취임 이후 학교 운영은 안정적임
-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나, 설립자 후손간의 갈등과 불법적 학원운영으로 분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체제 변경여부는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합치될 경우에 검토

10. 학교법인 세방학원(서일대학)

□임시이사 선임배경

- '99.10 교육부 감사결과 교육용기본재산 부당 매입(29건, 277억원) 등 대학 및 법인의 운영 비리가 적발,
-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이행으로 임시이사 선임(2000.2.16)
- ※대학 현황
 - 위치 : 서울 중랑구 면목 8동 49-3
 - 설립연도 : '79.3 (학생 5,840명)

□경 과

- '99.10. 교육부 감사실시(10/11~20), 위법·부당 사항 적발(총 12건)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이사장 개인재산 등)을 학교회계로 부당 매입 등 총 29건 277억상당액 집행
 - 법인세 환급금 미전출(10억원), 회계처리 및 법인과 대학운영 부당 등
- '99.12.27 위법·부당사항 시정요구 및 불이행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2000.2.16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파견
 - 이사장 김득수 등 7인

□현 상황

- 법인 및 대학운영은 정상적임
- 새 이사진이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이행을 위한 작업 진행 중
 - 재산처분, 부당취득 재산 중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 여부 판단 등
- 이용곤 등 전임원 8인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00.5.15)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 취소소송 및 동 효력정지신청(가처분 신청)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각하 및 기각('00.6.8) 되고 원심은 진행 중

11. 학교법인 아신학원(나주대학)

□임시이사 선임 배경

- '97.4 교육부 감사결과, 설립자 김광아의 교비 45억원 횡령 등 대학운영 비리가 적발되어 임시이사 선임
- ※대학 현황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 837
 - 설립연도 : '95.3(재학생 1,966명)

□경 과

- '97.4.25. 임시이사 선임(이사장 이대순 등 9인)
- '98.9.9 임시이사 자진사퇴로 교체 선임(이사장 이재근 등 9인)
- '99.5.28. 임시이사회에서 대학구조조정 방안 결정 후 교수 및 학생들 강력 반발, 격렬시위
- '99.7. 교육부 대학정상화 대책 수립·통보
 - 대학 구조조정은 의견수렴 후 학장 책임하에 추진 등 의문점 해소
- '99.8.24 교수협추천 학장임용('99.8.24~'03.8.23)
 - 이광웅 56세(전남대 사서주사로 동대학 시간강사)
- 2000.1.1 임시이사 재임(임시이사중 1명 교체)

□현 상황

- 법인 및 학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재정난으로 대학시설 열악
-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교수들의 격렬한 반대로 실행 곤란
- 대학을 인수할 독지가가 없는 한 근본적인 정상화 곤란

12. 학교법인 오산학원(오산대학)

□임시이사 선임 배경

- '77년 신금봉(태화고무회장)이 법인을 인수·운영하던 중 신금봉의 사망('91.11)으로 아들 신명수가 이사장으로 선임됨

- '93.6 신명수가 자기 측근으로 새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신금봉의 처와 갈등이 발생되어
- 양측간의 소송결과('98.12), 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로, 이사회 부존재 상태에 대하여 이사회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불이행으로 임시이사 선임
- ※대학 현황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7
 - 설립연도 : '79.3 (재학생수 6,284명)

□경 과

- '95.4.27 오산측 이사 3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 '98.12.2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 '99.1.30 법인 정상화 촉구제고
 - 이사회 구성 및 법인 정상화 방안 제출 촉구 및 임시이사 선임 제고
- '99.2.19. 임시이사 선임(이사장 정경모 등 9인)
- '99.1.1 학장 김연수 임용('99.3.3.~'03.3.2)
- '00.1.1 이사장의 학사관여 등 물의로 임시이사 교체(이사장 김하준 등 9인)

□현 상황

- 현 대학 및 법인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임시이사 선임 후 신명수측에서「임시이사선임 처분취소소송」제기, 현 서울고법 계류중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육부 승소]
- 설립자 가족(양자 신명수, 처 전금련)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

II. 경인여자대학 사태(학교법인 태양학원)

— <학교현황> —

-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48-4
- 설립연도 : 1992년
- 법 인 명 : 태양학원(이사장 : 백창기)
- 학 장 : 김길자(이사장의 처)
- 학생정원 : 12개학과, 입학정원 1,960명/편제정원 4,000명

□사태 진행경위

- 5.23. 교수협의회구성 및 직원노조결성, 학생들이 학장실 및 행정실 점거, 정문출입 폐쇄로 행정 마비, 학생수업 전면거부
 - ※교수협의회 : 전임교원 61명 중 59명 가입, 직원노조 : 직원46명 중 44명 가입
- 5.25. 학생과 교직원으로 경인여자대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발족

- 5.23 이후 현재까지 수업거부 및 학사행정 마비 상태

□비대위가 주장하는 주요 비리 내용

- 법인·대학을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온갖 파행과 비리를 저질러 왔음.
 - 이사장 백창기(남편), 학장 김길자(부인), 기획실장 백충현(아들)
- 교수, 교직원 인사의 파행
 - '92. 개교이래 교수 80명 사직케하고 직원 46명 중 5명만 정규직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6개월 내지 1년간의 계약직
- 등록금 과대책정/부당사용 의혹,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등 학교법인과 대학운영의 파행 및 전횡

□교육부 조치사항

- 5.30 교육부 관계관, 대학 현장 방문 실태조사
 - 사태파악 및 비대위 대표와의 대화
- 6.2 비대위 대표 교육부 방문 면담
 - 조속한 감사실시, 재단퇴진, 비대위가 추천하는 인사로 관선이사 파견 등 요청
- 6.5 2000년도 재정지원 제재조치-재정지원 유보(7억8천만원)
- 6.7~17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시작
- 6.10 학원 정상화 촉구 공문 발송(학장, 학교양측)
- 6.11 학장, 이사장을 불러 학원 정상화 촉구
 - 비대위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여 조속한 학원 정상화 도모 촉구
- 6.15 비대위 대표 면담 (요구사항 전과 동일)
- 6.17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종결
- 6.18 장관, 담당국장, 학교현장 방문 확인
 - ※교육부는 비대위, 법인 양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학원 정상화 촉구 중용 계속

□조치방안

- 이번 사태는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등 일반 사학분규에 비해 특이한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하는데는 한계
- 교육부에서는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2000.6.7일부터 6.17일까지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동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원을 정상화시킬 계획임

(질 의)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초·중등학생의 해외유학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왔는지?

(답 변)
○교육부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한 조기유학생 현황자료는 다음과 같음

<조기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95	'96	'97	'98	'99		2000.3~4
					1학기	2학기	
총 인 원	10,993	12,473	12,010	10,738	5,579	5,658	2,874
증감율(%)	-	13.5	△3.7	△10.6	11,237		4.6

<국가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 국가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동남아	기타
'99	5,389	1,335	602	518	435	300	609	2,049
2000.3~4	1,174	364	203	179	120	124	159	551

※참고로 일부언론에서 올해 1, 2월 두달간 조기유학생수가 3만여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는 유학생에는 초·중·고교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한 단기어학연수생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보도된 조기유학생수는 사실과 다름

(질 의)
많은 나라에 교육관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관이 각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실태나 문제점을 조사·보고한 것이 있는지?

-편법 조기유학생의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을 꺼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향후 조기유학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 편법유학생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성공적이 유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임

(답 변)
○2000.6월 현재 일본, 미국 등 14개국에 12명의 교육관과 33명의 한국교육원장이 파견되어 있으며,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변보호, 현지 지역인사, 재적 학교의 장학금 지원 유도 등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조기유학 규제완화에 대비하여 지난 3~5월에 교육관·교육원장을 통해 주재국의 교육제도, 조기유학 정보 및 성공·실패사례를 조사·보고받은 바 있음
○재외공관의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질 의)
과도한 조기유학을 억제하는 정책대안으로서, 중등교육의 하향 평준화정책을 포기하여 공교육체계를 바로 잡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초·중등 사학에 학생선발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을 부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 변)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학교의 교육정상화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7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과열 입시경쟁의 사회적 병폐 해결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교육의 수월성 저하 가능성, 사립고등학교의

- 위축 및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성화고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 등을 운영해오고 있음
- 또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 등 자율성 확보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금 책정권, 학생 선발권 등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음
- 다만, 이러한 제도는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음

(질 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문제
- 저소득층의 범주는 무엇이며,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은?

- (답 변)
-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능력이 부족한 차상위층 국민까지를 포함하여 말씀드릴 수 있으나, 소득 또는 소비 일정기준 이하를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2000년도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유치원 학비지원, 중고생 학비지원, 초·중등학생에 중식지원 및 정보화 지원 등 4개이며, 각 사업마다 정책배경, 사업목적, 성격, 예산규모 등의 차이로 각자 지원기준을 달리 하여 지원되고 있음
 -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단일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추진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 2000 저소득층 지원사업별 지원기준

구 분	인원	지원금액	지 원 기 준	비 고
유치원 지원	4만	226억원	생활보호대상자+105만원이하(4인가족기준)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원생 지원기준과 일치
중고교생지원	40만	3,200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저소득층	
중 식 지 원	16.4만	1,139억원	생활보호대상자+결손가정+실직가정학생	
정보화 지원	50만	415억원	생활보호대상자+모(부)자+장애인가정자녀+저소득층	

(질 의)
농촌지역 학생의 급식문제
- 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현황과,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및 재정지원 계획은?

- 등 급식시설 여건이 어려운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는 현재 전체의 42%인 1,179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덧붙임 2 참조>, 2002년까지는 전체 중학교에 대하여 전면급식을 실시할 계획임
- 한편, 중학교 급식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3년간 총 3천3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비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확보하되, 우리부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경 등을 통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임 1>

- (답 변)
- 중식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손가정·보호자의 질병·실직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부담할 수 없는 164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현황은 <덧붙임 1>과 같음
 - 중·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99년 말 현재 학교 중·개축 및 이전계획

시·도교육청별 학생 중식지원 현황

(2000.4월,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서 울	14,049	4,068	10,013	28,130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부 산	6,939	2,043	3,904	12,886
대 구	4,053	1,650	2,391	8,094
인 천	3,884	991	1,902	6,777
광 주	2,581	794	1,247	4,622
대 전	2,925	889	1,533	5,347
울 산	2,078	519	798	3,395
경 기	18,028	4,222	7,147	29,397
강 원	6,390	1,952	1,877	10,219
충 북	3,795	1,196	1,171	6,162
충 남	4,424	1,544	1,812	7,780
전 북	4,319	1,761	2,612	8,692
전 남	3,435	1,236	2,118	6,789
경 북	6,397	2,793	3,783	12,973
경 남	5,632	1,829	2,902	10,363
제 주	1,071	513	790	2,374
계	90,000	28,000	46,000	164,000

<덧붙임 2>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급식실시 현황
(2000.4월, 단위 : 교)

구 분	전체학교수	급식실시교수	비율(%)
서 울	353	111	31.4
부 산	157	11	7.0
대 구	106	8	7.5
인 천	94	17	18.1
광 주	69	25	36.2
대 전	70	51	72.9
울 산	41	15	36.6
경 기	378	216	57.1
강 원	175	101	57.7
충 북	115	80	69.6
충 남	186	61	32.8
전 북	195	77	39.5
전 남	254	63	24.8
경 북	275	219	79.6
경 남	239	85	35.6
제 주	41	39	95.1
계	2,748	1,179	42.9

(질의)

교육재정 확보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1조 6천억 원 정도의 지방교육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나, GDP 대비 교육재정의 규모는 '97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교육세의 징수 기한이 2000년12월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나라의 IMF 체제 진입이 후 감소하여 왔음
 - '97년 GDP의 4.5% → 2000년 GDP의 4.2%
-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연간 1.5조원의 재원을 확보 하게 되었으나,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현재의 교육여건 유지 수준 및 IMF 사태로 악화된 교육 재정에 우선 충당할 계획임.
- 교육세 중 2000.12.31까지 한시세로 되어 있는 세목은 4개 세목으로서 전체 교육세의 42.2%에 해당하는 2.5조원이며, 일부세목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이 사실상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통령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교

육자대회('99.11.23)에서 교육세 존치를 포함한 차질없는 교육재정 확보를 말씀하신 바 있으며

-우리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영구세로 전환토록 하고, 확보되는 재원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는 2004년까지 총 34조 3천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확보 가능한 재원은 23.6조원이며 추가확보 되어야 할 재원은 10.7조원임

-추가확보 되어야 할 재원은 교육세 증세로 6.4조, 국고재원 확보 2.1조원, 지방자치단체 부담 확대를 통하여 2.2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반회계 국가 예산의 묶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세의 증세를 통하여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이 불가피함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에게도 홍보 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을 계획임.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헌법 제4조 및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통일교육은 전 교과에서 걸쳐 지도되고 있으며, 특히 도덕과·사회과 등에서 집중 지도되고 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심도 있는 통일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은 통일의 당위성 인식,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바른 이해,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화해·협력·평화의지 고양, 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전개할 수 있음.

○아울러, 남북한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는 교육부에서 이미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실적이 있으며([별첨2] 참조), 향후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여 변화된 통일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 별 첨 : 1.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6차, 7차) 비교
- 2. 교육과정별 통일교육의 특징 비교
- 3.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 현황

[별첨1]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6차, 7차) 비교

(질 의)
 통일교육문제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 재설정 및 남북한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연구가 긴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답 변)

학교 급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강조 사항
초 등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인식과 통일 필요성 • 민족문화 유산 아끼기 •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 평화 통일의 방법 •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국가·국화 사랑하기 • 분단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인식 • 민족문화 유산 애호 및 남북한문화 교류 •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통일 국가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해 관심 갖기 • 북한동포 이해하기 • 통일의지 고취
중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통일 안보 생활 •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의지의 고양 • 민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바로 알기 • 안보의지와 평화의지의 균형적 배양 • 통일 준비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강조

학교 급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강조 사항
고 등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 민족 통일의 조건 • 통일 이후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남북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 민족 공동체의 변영 및 통일 한국의 모습 • 통일 대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통일정책의 바른 이해 •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시 •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이상의 비교는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를 단순하게 비교한 결과로서 향후 새 교과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며,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게 될 것임.

[별첨2]

교육과정별 통일정책의 특징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방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화해·협력교육 민족동질성 회복교육 통일대비교육
7차	1997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대북 포용정책)	

[별첨3]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 현황

1. 연구 목적

- 남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비교 분석 연구, 통합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서 편찬 방안 연구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 통일대비 및 통일 후를 예견한 교육과정·교

과서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남북 교육과정·교과서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점 해소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여 통일 후 남북 통합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코자 함.

2.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단 계	1차	2차	3차	4차
연구과제	남북 초·중등학교 통합 표준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학교급별·교과별 남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학교급별·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서 편찬 방안 연구	남북 초·중등학교 표준 교육과정 구조 체제 연구
연구년도	'94~'95년	'96~'98년	'98~'99년	2000~2003년

3. 연구결과 활용 방안

- 통일대비 학교급별,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구

성 및 교과서 편찬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료 제공

- 통일대비 정책 수립과 통일된 한국 사회의 구체적 교육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
- 통일 후 남북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기초적 자료원으로 활용
- 통일 한국사회의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기초모형 개발의 실질적인 자료원으로 활용

(질 의)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

(답 변)

-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통일부에서 마련한 통일교육 기본지침에 의거 수립되고 있음.
-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계,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협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고 있음
- 그리고 통일부에서 제작한 각종 계기교육 자료를 각급학교에 배포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 자료를 제작할 경우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내용을 검토·협의하고 있음

(질 의)

실업계 고등학생의 전문대학 특별전형에 권장하여 제도화되었으나, 실제 전문대학과 담당 교수들은 이들의 대부분이 수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답 변)

- 전문대학과 실고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실고 졸업생을 전문대학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토록 한 취지는
 - 실고 2. 3학년 과정에서 직업기초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전문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전공심화 교육 받게함으로써
 -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적응력이 있는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하려는 데 있음
- 동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일부가 전문대학 교육을 수학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각 전문대학이 실고와 자율적인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당해 대학의 자체전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임
- 전문대학과 실고간의 연계교육과정은 현장성 있는 우수 직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동 연계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직업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도·지원을 강화하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金德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 이념교육을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의 구체적 결정과 집행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대책

(답 변)

- 교육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2000년6월17일 학계, 관계부처,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일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될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 시행이래 교육부가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일교육의 기조로 추구하여 왔고
- 이를 기초로 하여 수립된 2000학년도 통일교육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 기본방향,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일부 지도요소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내용상에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문장표현이나 부적절한 용어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6월23일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고 수정·보완된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일선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향후 통일교육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음.
- 또한 금년 10월 중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CD-ROM타이틀을 개발하여 전국 각급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과서 위주로 지도되던 통일교육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실천·체험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임
-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제6차)의 부적절한 부분은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자료를 마련,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일선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며,
-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교과서는 화해·협력·평화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회복,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고한 안보의식에 기초를 둔 민주시민의식 등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임.

(李在禎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7차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답 변)

-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헌법 제4조 및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전 교과에서 걸쳐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도덕과·사회과 등에서 집중 지도되고 있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심도 있는 통일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은 통일의 당위성 인식,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바른 이해,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화해·협력·평화의지 고양, 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전개할 수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의 내용은 현재 편찬 중인 새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별첨 : 1. 교육과정별 통일교육 특징 비교
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용도서의 현장 적용 일정
3. 교육과정별 통일교육의 특징

[별첨1]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6차, 7차) 비교

학교 급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강조 사항
초 등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인식과 통일 필요성 • 민족문화 유산 아끼기 •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 평화 통일의 방법 •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국가·국화 사랑하기 • 분단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인식 • 민족문화 유산 애호 및 남북한 문화 교류 •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통일 국가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해 관심 갖기 • 북한동포 이해하기 • 통일의지 고취
중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통일 안보 생활 •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의지의 고양 • 민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바로 알기 • 안보의지와 평화의지의 균형적 배양 • 통일 준비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강조
고 등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 민족 통일의 조건 • 통일 이후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남북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 민족 공동체의 변영 및 통일 한국의 모습 • 통일 대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통일정책의 바른 이해 • 통일한국의 미래상 제시 •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이상의 비교는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를 단순하게 비교한 결과로서 향후 새 교과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며,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게 될 것임.

[별첨2]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의 현장적용 일정

학교급	학년	개발 기간	현장 적용시기	개발 상황
초등학교	1, 2	1998~1999	2000년	개발 완료
	3, 4	1999~2000	2001년	실험 적용
	5, 6	2000~2001	2002년	개발 중
중 학교	1	1999~2000	2001년	개발 중
	2	2000~2001	2002년	개발 착수
	3	2001~2002	2003년	개발 예정
고등학교	1	2000~2001	2002년	개발 착수
	2, 3	2000~2001	2003년	개발 착수

[별첨3]

교육과정별 통일정책의 특징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방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화해·협력교육 민족동질성 회복교육 통일대비교육
7차	1997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대북 포용정책)	

(질 의)

교사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내용도 현장과 체험을 가미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과 통일교육 전담교사 방안은 어떠한지?

(답 변)

-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교육관을 배양하고자 '99.8.23~29 사이에 3차에 걸쳐 2,38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금강산연수를 실시하여 참가자 중 81%가 바람직한 통일교육관 배양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학교현장 통일교육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4%에 이르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또한 통일교육원 등을 통일교육 전문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되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의 통일교육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음

- 앞으로 금강산연수와 같은 현장체험 위주의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현장과 체험을 가미한 통일연수의 확대에 현장성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7차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은 범교과에 걸쳐 통합 교육적 차원으로 지도되고 있는 관계로 통일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단기적으로 관련교과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를 강화하여 통일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 통일교육 관련교과

학교급별	관 련 교 과
초등학교	바른생활, 도덕, 사회
중 학교	도덕, 국어, 사회, 국사
고등학교	도덕, 국어, 사회(일반사회), 국사, 교련

(질 의)

민간이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통일부로부터 통일교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답 변)

- 민간이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 학교 통일교육은 교과교육을 통한 지도, 특별 활동을 통한 지도, 재량활동을 통한 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도 등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 현재도 통일교육 관련 행사시 민간단체 인사를 1일교사로 초빙하여 교육활동을 학교 나 름대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단체나 외부 강사를 통한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통일부의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을 활용하 는 방안
 - 통일부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들을 활용하여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등 학교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질 의)

통일교육 시범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와 이 제도의 확대시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답 변)

- 교육부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방향은 초·중 등교육의 지방자치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꼭 필 요한 연구과제만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 2000학년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제7차 교 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학교현장의 실험·적용이 필요한 11개교만 지정하였으며, 다른 과제들은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도 록 하였음.
- 따라서 통일교육 시범학교는 2000학년도에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23개교가 운영 중에 있음.
- 향후 변화된 통일환경에 따라 교육부 지정 연 구(시범)학교의 운영이 필요하게 될 경우 교육 부 지정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를 확대하겠 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통일교육 연구학 교를 확대하도록 권장하겠음.

(질 의)

통일교육을 생활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함.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 변)

- 교육부는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전 쟁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해 평화통일의 중요성 을 일깨우고, 분단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용 VTR자료를 제작·보급(2000.6.15)하 였으며
 - 금년 10월 중에는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CD-ROM타이틀을 개발하여 전국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과서 위주로 지도되던 통일교육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실천·체험중 심의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임
- [CD-ROM타이틀 내용]
- 자료명 :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지도 자료
 - 수록할 내용
 - 학교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침
 - 영역별 지도자료(분단·전쟁의 폐해와 통일,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북한사회와 주민생활 이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 교과별 지도자료(도덕, 국어, 국사, 지리, 미 술, 음악 등)
 - 과외활동 지도자료(학교행사, 재량활동, 클 럽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
 - 배부처 : 전국 초·중·고교 및 유관기관 당 각 1종

(질 의)

현실적으로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체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기준의 설정은 가능한 것이 아닌지?

(답 변)

- 과외전면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적 폐해를 야기하는 고액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액과외 교습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그리고 이 방안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고액에 대한 기준 설정이 불가피 함
- 그러나 고액기준에 대한 개념은 과목별, 지역 별, 학교급별, 학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 기준을 높게 정할 경우 과외비의 전반적인 인

- 상효과를 초래하며 낮게 정할 경우 범법자 양산 등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가 큼
-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고액과외의 기준설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 또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조세주의에 따른 세금부과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에
 - 교습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학부모 명단 공개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학습활동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따라서, 고액과외 기준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 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 의)
입시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개된 교육개혁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대 국민 홍보계획은 세워졌는지?

(답 변)

- 교육부는 '95년부터 교육개혁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유인물, 홍보책자, 방송출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개혁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데 노력해 왔음
- 그러나, 교육개혁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자원등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도 홍보사업(교육개혁기반조성사업) 예산을 '99년도(9,500만원) 대비 5배 증액한 4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 교육현장 우수사례 발굴·시상·사례집 보급, 교육정책(2002 새대입제도 포함) 설명용 영상홍보물·리플렛의 제작·보급, 홍보관 홍보내용 개선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육홍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2001년에도 홍보예산 5억원 요구 등 등 홍보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음
- '98~2000년6월까지 18개과에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제작·배포한 교육정책 홍보자료 중 주요자료(33종 800만부)내역 : 별첨

교육개혁사업 홍보자료 발간내역('98~2000)

번호	홍보자료명	발간일시	발간부수	담당부서
1	새로운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1998.12	200,000	교육정책담당관
2	양성평등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1999.4	118,000	여성교육정책담당관
3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자료	2000.6	100,000	"
4	성교육 포스터(2종)	1999.11	12,000	"
5	두뇌한국,그중심은 인재입니다	1999.6	10,000	대학원지원과
6	KOREAN EDUCATION for the New Millennium	2000.	1,000	국제교육협력담당관
7	Education in Korea	2000.	7,000	"
8	Study in Korea	2000.	3,000	"
9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1998.	100,000	지방교육자치과
1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요약본)	1998.	100,000	"
11	2000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II	2000.	46,190	지방교육자치과
12	2000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요약본)	2000.	90,990	"
13	새로운학교회계제도	2000.4	100,000	지방교육재정과

번호	홍보자료명	발간일시	발간부수	담당부서
14	새로운학교회계제도(요약)	2000.4	400,000	지방교육재정과
15	감사사례집	2000.	800	감사담당관실
16	2000 전문대학특성화사례집	2000.	500	전문대학지원과
17	21세기새학교문화를 주도하는 초중등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SIMS)	2000.	12,000	교육정보화담당관
소계			1,301,480	
18	국정홍보 길라잡이(책받침)	2000.	-	공보관실 (교육소식편집실)
19	행복한 노년준비와 고령자원인력자원화계획	1999.12	2,000	평생학습정책과
20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점은행	2000.1	500	평생학습정책과
21	제7차교육과정,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 생중심교육과정	1998.2	20,000	교육과정정책과
22	교직발전 종합방안	2000.4	85,000	교원정책과
23	바람직한 교육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참고자료 - 교원노조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7	500,000	교원복지담당관실
24	1999.7월부터 시행되는 교원노조제도는 이렇습니다	1999.7	(위에 포함)	"
25	수행평가의 이해	1998.12	10,000	학교정책과
26	「수행평가」이렇게 한다	1999.8	10,000	"
27	2002학년도대입제도개선안내자료집	1999.2	350,000	대학학사제도과
28	변화하는 학교모습	1999.6	500	학교시설환경과
29	'99,'98 우수시설학교	2000.1	500	"
30	21C HRD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이 핵심입니다.	2000.6	1,000	교육정책담당관
31	과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로 우리의 농어촌 교육 이렇게 좋아집니다	1999.6	1,000	지방교육자치과
32	교육마당21(월간지) ('98~2000.6)	'82창간	1,050,000	공보관실 (교육마당21편집실)
33	교육소식(격주간지)('98~2000.6,제31호)		4,650,000	공보관실 (교육소식편집실)
소계			6,680,500	
총계			7,981,980	

(질 의)

20일 고액과외 기준 포기 발표와 같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를 여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 변)

○우리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후 학계, 언론계, 법조계,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등 각계인사 20여명으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7차에 걸쳐 과외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 해 오고 있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난 6월20일 개최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으로, 동 위원회 또는 우리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과외교습 대책(안)이 마련되면 당정 협의 또는 교육위원회 보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더구나 여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지금은 당정이 긴밀히 협조하여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함

(질 의)

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 및 잡무의 경감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서, 현 교원이 real time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답 변)

- 교원연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음을 비추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함양을 위한 교원연수의 개선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임
 - 교원연수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 첫째, 자율연수 기반조성 및 활성화
 - 둘째, 수요자 중심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 셋째, 교원연수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에 있음
 - 이를 위해 '98.3부터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권 및 공·사립학교 교(원)장 자격연수 인원 배정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으며, 직무연수 대상자를 교육감 외에 학교장 등도 지명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를 개선 한 바 있음
 - 향후 신규·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제 인센티브 방안 도입,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Ed.D) 과정 개설, 해외체험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연계 추진하여 교원이 자율적인 자기개발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교원의 잡무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98년 발표한 『교원업무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공문서 경감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지난 '99년 학교행정개선 선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모든 중·고등학교와 3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 공공근로인력 1,900명, 공익근무요원 1,620명을 학교 업무보조인력으로 투입한 바 있고,
- 아울러 최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학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제한하는 등 업무를 경감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교원잡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과급효과가 적어 교원들이 잡무 부담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어,

- 교원의 시각에서 “잡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구성하여 홈페이지 개설·운영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수립하여 2000년9월 발표될 「교직발전종합방안」 최종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임

(질 의)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폐단을 중장기적으로 없애나가는 민간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할 ‘지역과외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 변)

- 공교육을 강화하고,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과외를 중·장기적으로 없애나가기 위한 민간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구성 하자는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는 바가 크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
-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도 불법과외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법과외대책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음
- 그리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고액과외 예방대책위원회」로 전환, 운영해 오고 있음
-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